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KT&G가 세계로 뻗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서
세계 TOP5 글로벌 기업으로 -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낸
KT&G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ealthy Future of Korea !

지난 50년간 (주)한국백신이 지켜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뻘때수니



누군가 나를 떠올리면 '하루마유?' 하고
안부를 물어 주는 게 참 귀마를 일어난 걸 느껴요
생각났어요. 저도 오래만에 친구에게
'하루마유?' 하고 연락했습니다.
'따윈 땡큐' 라는 답을 기대하면서요.

커버스토리

“2018년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국민투표에서 찬반만을 표시하는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7_11, 12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60호

경실련 | 공동대표 선월몽산 김완배 김대래 중앙위원회의장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7년 11월 23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동승동 칼럼

08 새해에는 불평등의 뿌리를 뽑아야 / 윤순철

특집

12 ① 2017년 국정감사 평가 / 김삼수

이슈리포트

20 ① 후분양 흔들기를 멈춰라 / 최승섭

25 ② 소비자 이슈(상품권법, 집단소송법, GMO표시제) 리포트 / 윤철한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

32 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 손희준

36 ②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김승원

42 ③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 이기우

시사포커스

48 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위하여 / 조성훈

51 ②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 정택수

54 ③ 부실시공 및 허위평가 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 고발 / 김성달

60 ④ 세입자의 잘못 아닌데, 그냥 나가라? / 남은경

63 ⑤ 제빵사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 오세형

66 ⑥ 재벌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 이성윤

69 ⑦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구미 민간공원 / 조근래



48 시사포커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위하여



51 시사포커스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지역이야기

72 광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 박수민

75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 소비 강좌를 마치고 / 유병욱

우리들 이야기

78 언론투쟁의 현장에서 임장원 회원을 만나다 / 윤은주

85 해화동 이야기 - 학림다방 인터뷰 / 윤은주

91 문화산책 - 아름답게 슬프다(빈센트 반 고흐) / 박지호

이미지로 보는 이슈

94 국정감사 평가 카드뉴스 / 유애지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98 경실련 일일보고

100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101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72 지역이야기
광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78 우리들 이야기
임장원 회원 인터뷰

새해에는 불평등의 뿌리를 뽑아야



2017년 정유년은 닭의 해였습니다. 올해 기억나는 숫자는 0, 4, 12, 80, 100, 103, 1700입니다. 0은 촛불 시위로 인한 구속자이고, 4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4%이며, 12는 지난 3월 중순 5일 동안 모금된 촛불집회 시민 후원금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80은 광화문 광장 일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평균 체류시간 80분이고, 100은 촛불시민과 청와대 간의 최단거리 100m이며, 103은 촛불집회가 동시에 개최된 지역입니다. 마지막 1700은 23차례의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누적인원 1700만 명입니다. 시민들은 정의, 평화, 연대를

기치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절제와 품격 있는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광장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한국사회 진단은 “이게 나라냐?”였고, 해법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개혁이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데 이게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은커녕 더욱 악화가 되니 “이게 나라냐?”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맺은 경제적 성과가 얼마나 평등하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가는 사회 지속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들은 성장의 결과가 잘못 분배되고 있고 누가 성장의 수혜를 누리고 누가 소외되는 지를 체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불평등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성장관리에 골몰하였고 그 성장정책의 결실도 결국은 왜곡된 분배구조에 따라 특혜를 누리는 층에 돌아갈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이 재벌기업과 자본권력에 포획된 상태입니다. 재벌들이 돈 주고 권력을 산 것이나 다름없고, 재벌들의 탐욕이 소리 소문도 없이 관철되는 사회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소득과 일자리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벌들의 든든한 자본력을 지원받은 2세대와 3세대들이 골목까지 파고들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여도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도 이에 맞설 저항집단은 없습

니다. 시민 개개인들이 촛불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가난, 부패, 불평등이란 동등한 조건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 계급의 해체, 소득분배 개선으로 불평등을 완화, 높은 교육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후견주의 정치와 엽관주의 관료제를 억제하여 신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한국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화를 이룬 대만과 달리 재벌에 의존한 경제개발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 심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경제적 불평등의 뿌리는 박정희정권과 재벌의 유착입니다. 박정희정권은 재벌 의존의 관치경제, 반공주의, 노동 배제 등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론 정치-경제-관료권력의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박정희정권의 유산은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재생산되고 있으며, 후견주의 정치와 엘리트 관료들에 의한 국가 포획을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밝혀지는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군부, 재벌 등 권력자들의 커넥션은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아주 저급한 박정희정권의 유산이자 그것을 쫓고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민낯입니다.

박정희의 권위주의 시대 이후 경제력을 장악하고 재생산해 온 전위대는 전국경제인 연합회입니다. 전경련은 중앙행정기관 8개 기관에 12개 위원회(최저임금, 국민연금, 고용 보험, 소비자 등)에 참여하여 재벌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국무총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14개 중앙 정부기관이 전경련과 약 30여 차례 경제교육 위탁, 규제개혁 심의, 공관장 교류, 정책 간담회 등 명목으로 총리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세금까지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낮은 시세를 반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매각 67.5억 원이었으나 공시가격 28.7억 원으로 시세반영율이 42.5%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전용 45㎡)의 공시가격은 1.9억으로 시세(2.5억 원) 76.9% 수준입니다. 땅값의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도 15대 재벌의 사육을 조사해봤더니 3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집과 땅을 가진 만큼 보유세를 합당하게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산가들과 권력자들의 암묵적 동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건국이래 70여 년간 누적된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선진국들, 미국은 1930-40년대 뉴딜시대에, 일본은 2차 대전 후, 이스라엘은 2013년에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완성하였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는 구조개혁, 경제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형태의 개혁, 소유와 지배의 완전분리의 전문경영인 기업구조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들의 친인척기업 몰아주기, 하청회사 압박 완화, 무분별한 신규진출 억제와 행정규제는 불평등 구조 개선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에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시민들이 새 희망을 갖는 해이길 기대합니다. 



2017 국감, 국민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

-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10월 12일(목)부터 31일(화)까지 진행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 됐다.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감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1일 평가 결과와 13개 상임위원회 2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 당리당락에 빠진 '정쟁 국감'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작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생산적인 정책·민생국감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이번 국감이 박근혜 정권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는 국감이고, 1기 내각 구성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감 시작을 앞두고 불거진 야권발 정계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국감 중반 제1야당의 무책임한 국가 보이콧을 지켜보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락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향,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무능심판'을 내세웠던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국민 인증에 없는 여야 반성해야

국감 초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방송장악 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 댓글공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지난 9년간의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 무능 인사 임명강행 등을 신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면서 정책·민생국감보다는 과거 정권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시작부터 주요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렸다. 여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야당도 정계개편에 몰두할 뿐 존재감을 드러낼 이슈 제기가 없었다.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책감사에 나서야 함에도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엉터리 자료와 억지 주장, 중복질의도 많았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현실성 없는 '싱글세 도입'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고, 산자위 국감에서 영세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은 빠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만 몰두한 것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자격문제로 파행을 빚고, 법제처 국감에서는 '막가파 대감', '완장', '죽여 버리겠다' 등 표현들이 나오며 막장 분위기를 조장했다.

10년 연속 파행을 빚은 교문위는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의혹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망나니'라고 언급한 발언이 나와 여야 간 고성이가 이어졌고, 과기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시정잡배' 발언이 논란이 됐으며,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한 '좌파인사 장악' 공방으로 국감 개시 50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수부 국감에서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문건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해 2시간 동안 정회했고,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는 총리실 2급 공무원에게 사상검증에 치우친 질의가 이어져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민생이슈를 주도했다는 자화자찬과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준비로 적폐청산과 민생·안보를 지키는 내실 있는 국감을 주도했다고 자평하고, 야당이 국감을 정치공세의 장

으로 만들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보복 국감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정당으로 차별화했지만,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론전과 힘겨루기로 인해 정책민생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잿밥에만 관심있는 국회

여야는 올해 처음으로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적극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거물급 증인이나 핵심 증인의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증인채택을 가로막는 행태도 여전했다. 어렵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도 반복됐다.

환노위와 과기위에서는 정의당이 4대강 사업 및 방송장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위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여야가 맞서 국감이 파행을 겪다 여야 간사 간 협상을 통해 김관진 전 실장과 정의용 실장,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기위의 '방송언론 장악' 핵심증인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은 모두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런 외중에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 부실 국감의 주범들이 있다. 지방선거 후보군들이다. 국감기간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방미 수행단에 함께 했던 심재철(기재위), 이주영(외통위), 정진석(국방위), 이철우(산자위), 염동열(교문위), 강효상(과기위) 의원 등이다. 이주영 의원은 경남도지사 후보로, 정진석 의원은 충남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의원은 경북도지사 후보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2017년 11월 12일

야당도 의원외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로 한반도 안보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자칫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국감을 팽개치고 방미에 나선 것은 개인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한탕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감보다 우선해서 가야했던 이유, 해외 순방의 목적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 개헌 통한 상시국회·상시국감 반드시 도입해야

올해 701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6년 691개보다 10여개 늘었고, 2015년의 77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에 많게는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현실을 볼 때 졸속·부실 국감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교문위는 하루에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고, 이중 14개 피감기관은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도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 전반을 한 번에 몰아서 감사하는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중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매년 심각해지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아닌 반드시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에서 연중무휴의 상시국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상시국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다. 상시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나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가려 즉각 시정토록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도 중요하다.

■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경실련은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국감 시작 20일 전에 전체 의원실에 국감 보도자료, 질의서, 정책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228명의 의원들이 정책자료 6,145개를 보내주었고,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추가적으로 통신사 3개, 중앙일간지 15개, 지역일간지 27개, 전문지 11개, 경제신문 7개, 인터넷 언론 등을 참고했고, 중요 사안이 있는 상임위는 국회방송 등을 직접 모니터 했다.

정책자료 초 6,145개 중 보도자료는 5,249개로 85.4%를 차지했고, 질의서가 859개로 14.0%, 정책자료가 37개로 0.6%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121명 중 96명의 의원이 응답해 79.3%가 정책자료를 생산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07명 중 77명(72.0%)이, 국민의당은 40명 중 36명(90%), 바른

〈표 1〉 정당별 국감 정책자료 현황

정당	의원수	응답자(명) (응답비율)	합계(건) (전체비율)	보도자료	정책자료	질의서
더불어민주당	121	96 (79.3%)	2,980 (48.5%)	2,664	32	284
자유한국당	107	77 (72.0%)	1,584 (25.8%)	1,300	1	283
국민의당	40	36 (90%)	1,134 (18.5%)	991	4	139
바른정당	20	11 (55%)	215 (3.5%)	121	0	94
정의당	6	6 (100%)	155 (2.5%)	128	0	27
민중당	2	2 (100%)	77 (1.3%)	45	0	32
합계	296	228	6,145 (100%)	5,249 (85.4%)	37 (0.6%)	859 (14.0%)

* 무소속 의원 2명은 정책자료를 보내지 않음.

〈표 2〉 상임위별 국감 정책자료 현황

위원회	정원	응답 의원	보도 자료	질의서	정책 보고서	합계
법제사법위원회	17	12	165	132	0	309 (4.6%)
정무위원회	24	21	433	39	1	473 (7.69%)
기획재정위원회	26	19	448	23	2	473 (7.69%)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24	18	307	40	0	365 (5.6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	22	449	44	4	515 (8.08%)
외교통일위원회	22	7	83	8	0	98 (1.48%)
국방위원회	17	11	178	52	0	241 (3.74%)
행정안전위원회	22	16	402	99	0	517 (8.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16	590	14	3	620 (9.8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25	633	97	11	755 (12.0%)
보건복지위원회	22	20	416	15	0	451 (7.01%)
환경노동위원회	16	13	253	1	6	267 (4.23%)
국토교통위원회	31	28	892	295	10	1,215 (19.4%)
합계	296	228	5,249 (85.4%)	37 (0.6%)	859 (14.0%)	6,145 (100%)

정당은 20명 중 11명(55%), 정의당과 민중당이 각각 6명, 2명 모두 정책자료를 생산해 100% 응답을 했다.

다선의원 일수록 정책자료 생산이 미흡했으며, 원내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들도 정책자료 생산이 많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부처 장관으로 겸직하는 의원들의 경우도 정책자료 생산이 거의 없었다.

정책자료를 가장 많이 생산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1,000개)이고, 정원 대비 응답의원도 높았다. 가장 적게 생산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91개)로 다선 중진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응답자도 전체 22명 중 7명(31.8%)에 그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로 국정감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3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군포시갑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수원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고양시병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재선, 인천 남동구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재선, 충남 천안시을
	황주홍	국민의당	재선,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남 김해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은평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재선, 인천남동 을
	정동영	국민의당	4선, 전북 전주병

후분양 흔들기를 멈춰라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한 이후 후분양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부문은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은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며, 시민들이 일평생 하는 구매행위 중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선분양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물건을 보지 못하고, 모델하우스와 홍보지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했다. 500원짜리 볼펜도 잘 나오는지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데 말이다.

1977년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도입된 선분양제는 수십 년간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공급자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유지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분양권 투기가 가능하게 되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상 부실시공, 자재 바뀌 치기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사들은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분양가 규제를 풀어주면 후분양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2000년즈음 투기와 부실시공 등 선분양의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후분양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정부가 후분양제 로드맵을 만들기에 이른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관료의 시간끌기로 인해 결국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0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과거의 반복이다. 김현미 장관 발언 이후 마치 의도한 듯이 주택도 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 연구 용역보고서가 야당의원을 통해 발표되며 논쟁에 불이 붙었다. 보고서는 후분양 시 건설사들이 연간 3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

이 7.8% 상승할 것이며, 신용도가 낮은 업체가 공급했던 약 22%, 연간 약 8.5만호~13.5만호의 주택 공급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사실일까?

부작용 1. 사업비 증가로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분양가격 상승이다. 기존에 소비자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했던 건설사들이 은행차입 등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LH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후분양 단지들의 기간이자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대비 0.57%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9.1대책 이후 LH공사는 5개 단지, 5,213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호매실 B8, 2016년 세종시3-3생활권M6이 공정률 40%, 호매실B2, 의정부민락2A6, 강릉유천B2가 공정률 60%로 후분양했다. 이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표 1〉 LH공사 후분양 시범단지 분양가 중 후분양기간이자 비율(가구 평당)

(단위: 만 원, 평)

구분		호매실 B8	세종시 3-3M6	호매실 B2	의정부민락 2A6	강릉유천 B2	계
분양가	택지비	332	146	315	244	144	226
	건축비	593	643	620	630	610	625
	계	925	789	935	874	754	851
후분양 기간이자	금액	2.4	4	4	6.9	5.6	4.8
	비율	0.26%	0.50%	0.43%	0.79%	0.75%	0.57%

5개 분양아파트의 총사업비와 후분양 기간이자를 비교한 결과 총 사업비 대비 0.57% 상승에 불과했다. 평당가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단지 평균 851만 원의 분양가 중 후분양 기간

이자 4.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기존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차이가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2.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HUG 보고서는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주택 공급량이 22%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HUG의 보고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HUG는 시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탁사, 투자회사를 시공순위 100위 초과로 분류해 중소건설사가 공급하는 것인양 표현하며 후분양 시 이들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공급은 사업자인 시행사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 분류되는데 건설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다수 신탁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시행한다.

또한 대기업이 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설립한 계열사, 심지어 LH공사가 설립한 시행사마저 후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실련이 신용도 C급 이하 시행사가 공급한 아파트 중 시공능력순위 30위 내의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시행사를 확인한 결과, 전체 9.7만 세대 중 4.2만 세대, 43%가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공능력 13위인 호반건설의 경우 계열사로 스카이라빙, 스카이하우징, 티에스개발, 티에스주택, 티에스건설 등 10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계열사 시행사로 주택을 공급했다. 27위 반도건설역시 대창개발, 대영개발, 반도씨앤에스, 반도이앤지, 제니스개발, 한길개발, 한숲개발 등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했다. 공공택지 추첨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LH공사가 설립한 김포한강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구시가 포스코건설, 하나은행 등과 설립한 이시아폴리스 등도 역시 신용도가 C급 이하이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PFV를 설립해 공급한 1.2만 세대는 시행사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후분양 시 감소물량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이 후분양 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투기 노린 분양권 전매 시장 소멸로 정상적 공급구조 만들어야

〈2016년 이후 주택 거래량 및 분양권 전매 건수 비교〉

(단위: 만 원, 평)

구분	아파트 거래	분양권 거래		
		계	분양권 전매	
			전매량	분양권 거래량 대비
2016.1~2017.9	2,099,228	850,823	303,032	36%
박근혜 정부 이후 추정	5,184,783	1,749,063	626,398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예시〉 시공능력 13위 호반건설 계열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C등급 이하 분류 예시

구분	연도	건수	면적	가격	비고
호반건설	2016.1	1,200	150,000	1,200,000	C등급 이하
	2016.2	1,100	140,000	1,100,000	C등급 이하
	2016.3	1,000	130,000	1,000,000	C등급 이하
	2016.4	900	120,000	900,000	C등급 이하
	2016.5	800	110,000	800,000	C등급 이하
	2016.6	700	100,000	700,000	C등급 이하
	2016.7	600	90,000	600,000	C등급 이하
	2016.8	500	80,000	500,000	C등급 이하
	2016.9	400	70,000	400,000	C등급 이하
	2016.10	300	60,000	300,000	C등급 이하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동영의원실 제공.

리뷰: 김민정

2017년 11월 12일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30만 건에 이른다. 2016년 17만 건이며, 올해는 13만 건이고, 월평균 전매량은 2016년 14,000건이었으나 올해 14,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양권 거래량은 85만건으로 거래된 분양권 중 36%가 전매된 것이다. 전매비율을 박근혜 정부의 전체 분양권 거래량에 적용하면 박근혜 정부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약 63만 건이 전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권이라는 딱지거래까지 이루어지며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회 이상 거래자는 약 23.4만 명에 달하며, 6년 동안 한 거래자는 무려 89차례나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양권 거래를 한 셈이다. 후분양 시행으로 이같은 수요가 사라질 경우 일부분 주택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도 그 여파는 크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조차 차액을 노리고 빚을 내 분양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 원에 달한다. 현재의 분양수요 중 적지 않은 비율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인 것이다.

후분양하면 분양권 거래가 사라지고 웃돈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도 원천 차단되어 실수요자들을 위한 질 좋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금과 기술이 없는 중소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선분양 특혜에 안착해 소비자 피해를 키워온 원인이기도 한 만큼 소비자 중심의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되어가는 단계로 보아야 한다. 특히 분양권 전매 가격 상승,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 후분양으로 인한 잘못된 주택 공급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20년을 돌아왔다. 더 이상의 후분양 흔들기를 멈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후분양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과 정치권의 동참을 기대한다. ☺☺

경실련 소비자 이슈(상품권법, 집단소송법, GMO표시제) 리포트 발간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raid1427@ccej.or.kr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GMO완전표시제, 상품권법 등 3개의 소비자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슈리포트는 지금까지 활동으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맞아,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달됐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 집단소송법 이슈리포트는 집단피해구제를 위한 법제 및 현주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GMO는 인위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한 생명체를 말한다. 현재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을 수입해 먹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많은 예외를 두어 실제로는 GMO가 표시된 식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GMO완전표시제 이슈리포트는 GMO에 대한 이해, GMO 수입 및 표시현황을 설명하고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기 어렵다', '관리가 불가능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정부와 기업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외식, 서적, 전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되는 종이상품권 규모는 매년 약 8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관련법 부재로 얼마나 발행되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상품권법 이슈리포트는 상품권 제도 연혁과 문제점, 해외 법제와 국회 입법 현황을 검토하고 상품권법 제정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슈 1 집단소송법

1. 주요 집단소비자 피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최소 1,2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수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병과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다.

1991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대략 7억 2천 9백만 건에 이른다. 이는 최소 수치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생활 조사, ▲불법채권추심, ▲가입자 모집 마케팅, ▲대출 사기, ▲대부업체 마케팅, ▲선거 후보자 홍보, ▲카드사 모집 마케팅, ▲보험 모집 마케팅, ▲각종 타겟 광고 마케팅,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래, 공정위가 2015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총 2,399건의 사건 중 담합 사건은 425건(약 17.7%)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총 과징금 부과금액의 약 68.6%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 집단피해구제 법제

현재 집단적 피해구제의 수단으로는 집단분쟁 조정제도와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단체소송,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집단피해구제 법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3.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

집단소송제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성격상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소비자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고액이며,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손해배상의 한계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4.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집단소송법은 ▲적용범위(환경 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일반법으로 도입해야 하며 ▲집단소송

허가요건 완화 및 소송허가 결정 기한 제도화, ▲입증책임 경감 및 소송 관련 문서의 문서 제출명령 불응 시 사실인정권한 법원에 부여,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이 포함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이슈 2 GMO완전표시제

1. GMO 수입 및 표시현황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천만 톤의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다. 매년 가구당 먹는 GMO는 약 109kg이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옥수수 22kg, 콩 19kg에 해당한다. 업체별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CJ제일제당 32%, 대상 22%, 사조해표 17%, 삼양사 16%, 인그리디언코리아 13%로 전체 99.99% GMO 농산물을 5대 식품대기업이 수입해 왔다.

경실련은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 두부, 두유, 라면, 식용유, 장류,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580개 제품 중 1건, 2017년 438개 제품 중 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GMO 표시가 된 제품은 수입 가공식품이었고 식품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었다.

2. 정부와 기업의 주장 반박

Q1.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 없다. 정부와 기업은 지난 20년 동안 GMO표시제도 개선요구에, 늘 ‘안전성’을 내세워 개선목소리를 회피했다.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알권리가 중요한 핵심이다. 가격,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자, 용량, 원재료명 등... 대표적으로 원산지표시는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이다. 표시는 소비자가 알고 싶은 것,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Q2.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면, NON-GMO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실련이 한국농업유통공사에서 수입·승인하고 있는 대두의 비의도적혼입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0.22%에 그쳤다.

Q3. 관리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기업은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표시를 예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수입하고 있는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작성한 식품공전에 제시하고 있는 정성평가(GMO 포함여부 검사)는 전체 승인된 농산물의 29%에 불과하다. 정량평가(어느 정도 양이 들어있는 지 확인하는 검사)는 17%에 머물러 있다. 또한 GMO 표시는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에도 과학적 검증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Q4. 소비자인식이 부정적이라 표시할 수 없다.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이라, GMO 표시가 되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외면하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숨기려했고, 표시하지 않으려 했고,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의 행태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 GMO완전표시제 도입 방향

20대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비의도적 혼입치가 0%인 가공식품에 대해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표시를 하고,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권 시장의 비정상적 성장. 최근 5년간 약 38조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연평균 약 8조 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상품권이 지하 경제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등 음성적 거래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액상품권의 증가. 2016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8조 8,915억 원 중 10만 원권 이상 고액 상품권이 5조 3,421억 원으로 전체 발행량의 60%에 달한다. 50만 원권 상품권은 5만 원권 화폐에 비해 1/10 수준으로 200장이면 1억 원으로 음성적 거래의 악용 소지가 높다.

통화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유령화폐. 2016년 상품권 발행액이 역대 최고규모인 8조 8,915억 원이 발행됐다. 이는 같은 해 화폐발행액인 10조 546억 원의 약 84%에 달하는 수치이다. 매년 상품권 발행액은 화폐 발행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악용 소지가 높은 세제혜택.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즉, 법인 등은 상품권을 별도의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탈세 및 불법로비 등 범죄에 사용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품권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품권 발행 및 법인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가 전년 대비 20.5% 늘어나는 등 급증했다.

상품권 낙전수익.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 수익 등을 취함에도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다. 경실련이 추정한 낙전수익은 2018년도에 2,173억 원의 낙전이 이른다. 이는 불로소득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다.

2. 상품권법 제정방향

상품권법은 ▲모든 상품권 발행자 발행 및 실적 등 금융위원회 보고, ▲유효기간은 소멸 시효와 동일하게 5년(최초판매일 기준), ▲소비자 보호 장치인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의무화(미상환 금액의 50%), ▲상품권 낙전수익의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출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슈 3 상품권법

1.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점

상품권의 직접적 규제 법률의 부재로 관리·감독의 미흡, 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 방치를 야기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 주민자치, 아래로부터의 개혁 –

손희준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shja9201@chol.com



2018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지방선거)는 조기 대선 이후 첫 전국 선거로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여겨지면서 중앙정치 대립의 장으로 변질·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중간평가나 중앙 정치의 이슈논쟁으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등 민생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 및 분권전문가와 지역경실련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리즈 칼럼으로 발표해 지방자치를 다시 생각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지역)을 “자치(自治)”해 왔는가?

어느 덧 지방자치를 재도입한 지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는 ‘돈 먹는 하마’이고, 지나치게 지역갈등과 집단 간 반목을 조장하며, 자치능력과 역량이 부족한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작은 이권을 나누어먹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무슨 자치와 분권이냐라는 비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지방자치를 하기에 군(郡) 지역은 지나치게 인구가 적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저해하며, 몇몇 과시

적인 단체장들의 지적 쌓기에 병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 시(市)와 통합해 행정구역을 넓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도 한다. 어찌 보면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조건 커야 하고, 큰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 괜스레 작은 것에 대한 지나친 열등의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과연 우리가 지방(지역)을 “자치(自治)”해 왔는지도 궁금하다. 자치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인데,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고, 지도자가 우리가 원하는 데로 일을 제대로 잘 하는지를 감시하고, 또한 지도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잘하라고 열심히 지지하고, 만약 잘못하면 우리 손으로 그만 두게 하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게 하며, 우리 지역과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방향과 목표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 왔는지를 자문해 봐야 할 것인데 나 스스로도 솔직히 자신 있게 그러해 왔다고 대답할 수 없다.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존재

오히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만을 치러 온 것이 아니었나 싶다. 게다가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들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방임해 오다가, 언론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서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역성을 내고 비난을 하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집권론자와 중앙언론들의 달콤한 선전에 넘어가곤 해 왔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이 되고,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 책임지는 자치는 아직 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는 동네자치와 주민참여 활동이 왕성한 지역도 있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정신이 밤하늘의 별 빛처럼 빛나는 곳이 있다고 하니 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조차 잘 모른다. 그러니 그들



이 우리를 대표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늘 혈세(血稅)가 새고 있다고 하며, 주민들은 오히려 눈 먼 돈은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써야 하고, 더 많은 각종 시설과 더 많은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며, 능력 있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뽑아 놓으면 항상 지역구에 더 많은 보조금과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랑이다.

지방자치의 뿌리와 근본을 더욱 강화해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실과 개념상의 혼돈 속에서 과연 주민자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상상을 해 본다. 우리 동네어귀의 몇 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는 우리 조부모와 부모가 늘 함께 해 온 곳이며 부모님은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던 놀이터였다. 또한 느티나무 앞 횡단보도는 버스 정류장이어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담소하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느티나무를 베어낸다고 한다. 과연 무조건 나무를 베는 것이 능사인가? 오히려 그 곳밖에는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가를 주민들이 직접 모여 토의하고, 결정해서 행정관청에 통보하면 안 되는 것일까? 시골의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초등학교를 폐교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가? 이 역시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며 폐교조치보다 더 나은 결정은 할 수 없을까? 우리 동네 골목의 보안등은 왜 꼭 거기에만 있고, 유치원과 학교는 왜 그리 사립이 많은가? 조금만 가물면 수도가 안 나오고, 쓰레기 버리기는 왜 그리 복잡한가? 이런 자질구레한 주민요구와 생활의 불편들을 자치가 해결할 수 없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을 누군가가 결정해서 우리에게 강요해 온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찬찬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날 중고등학교 시간에 있었던 H·R(Home Rule)시간은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지만, 국영수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서,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의 수업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나만 잘하면 되고, 또한 나만 아니면 다행이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을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로 인식하여 수능과 학생부에서의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출세하는 것이 제일이면, 박근혜 정권 적폐의 중심이었던 머리 좋고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한 우병우, 김기춘 같은 인간들을 양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협력과 협동 및 공생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힘들고 귀찮고 번거로운 자율과 자치의 길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관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결정해서 시키는 일만 잘 하면 되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스스로 벌기 보다는 남의 돈으로 살면 “다행이다”라는 의존적이며 의타적인 삶의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토크빌의 격언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몰아쳐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 양성이야말로 말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AI시대의 도래와 같은 격랑에도 버티게 해 주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보기에만 그럴듯한 나무들은 한 번의 폭풍에도 뿌리 채 뽑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오히려 잔디나 잡초와 같이 뿌리가 튼튼한 풀들이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지방자치의 뿌리와 근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게 된다. ☺☺☺



지역경제

2017년 11.12월호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상과 왜곡된 조세구조가 낳은 지방재정 위기 -

김승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pine-sw@hanmail.net



잦은 시장 교체 후 재정위기의 긴 터널 탈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선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4기에 시작된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으로 민선5기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똑같은 쟁점으로 민선6기 선거에서도 시장이 바뀌었으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에게 재정위기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현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건 다른 경쟁 후보 진영에겐 달갑지 않은 뉴스일 뿐이다.

지금 인천시 재정상황은 어떨까. 시는 지난 7월 4일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6월 기준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1%로, 재정 정상단체 기준인 25%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 연말엔 22.4%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돌이켜 보면 시 채무비율은 2015년 3월, 3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그해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40% 이상이면 '위기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총 부채를 9조 원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집권 외 정당(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힘 있는 시장'의 성과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세 증가와 재산매각의 영향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민선6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행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갈등을 빚은 사회복지제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런 성과라고 평가한다. 서로 다른 평가들이 엄존하지만

민선4기부터 불거진 재정위기 논란을 마무리 질 때가 왔다. 재정위기를 겪게 된 내외부적인 원인 분석과 지역사회의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이 재정위기를 낳았다는 걸 기록하자.

위기의 서막, 지방공기업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동원되다.

민선3기 인천시장은 입성(2002년 7월 1일)한 지 1년도 채 안 돼 도시개발공사를 전격 출범시킨다. 낙하산인사, 민간경제 침범과 중복투자 등의 지적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워 공사 설립을 강행했다. 이어 2005년에 근대개항장, 연안도서 등의 관광 진흥을 명분으로 관광공사까지 설립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시민사회는 이들 지방공기업이 시 재정위기의 기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무리한 지방공기업 설립이 위기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우선 인천시는 지방공기업,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 당시 다양한 시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사 자산을 늘려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했다. 설립된 공사가 많을수록 개발재원도 늘어난다. 게다가 이들 공사를 설립목적에 걸맞지도 않는 사업에 동원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주거개발에서 도시개발로 중심이동을 시켰고, 이들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에 연관성도 없는 교통공사와 지하철공사, 관광공사 등이 출자하도록 강제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설, 송도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등에 참여시킨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성격은 무리하게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동원한데서 비롯됐다. 특히 지방채 발행의 한계를 알고 무리한 공사채 발행을 감행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여느 지방자치단체도 비밀비재하다. 이런 데는 왜곡된 현행 조세구조가 한몫했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이 부동산 거래세다 보니 세수 증대 방안으로 너나없이 도시개발에 목매 왔다. 만약에 지역 산업 및 기업 활성화 관련 지방세 비중이 컸다면 자연스레 그리로 접근했을 것이다.



재정분권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화해야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졌고 의존 재원은 늘어났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푸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의 대표를 지역주민이 뽑는데 그들에게 과세권은 차치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사무에 걸 맞는 자주재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도 문제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조속히 현행 8:2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등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 게다가 어떤 조세를 이양하느냐 또한 중요하다.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방세 확대가 관건이다.

한편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세기 중반 영국 의회가 투표권이 없던 북미식민지 정착 영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이들이 항거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미국 독립은 영국본토의 부당한 과세권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으로 발전됐다. 주지의 사실은 시민 복리를 위한 제반 사무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제반



재원도 그리 쓰이는데 정작 모든 과세권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제대로 된 재정분권을 하려면 '지방세 법률주의'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기본권 보장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 등을 담은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민사회에게 올 하반기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분권을 실현할 거대 담론을 형성함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도 발굴해 공론화해야 한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앙정치권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위한 지역과제 발굴 통해 시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이번 개헌이 자당에 이익이 되는지를 두고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조기 장미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공약도 언약으로 밀릴 판이다. 개헌 정국 만들기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정치권에게 밀바닥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제안컨대 일반시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제를 발굴해서 여론화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과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도 엄존한다.

일례로 항만도시 주민들은 지방행정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항만행정이 따로 노는 걸 늘 목격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계획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지 않은 지방분권 과제였다. 지방 해양항만청과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등의 중앙사무가 지방행정기관의 경제사무로 이관된다면 뒤따르는 정부재정도 지역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될 것이다. 현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교통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한 도구를 갖고 있고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가속화할 지역 차원의 기재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서 추진되면 지금의 불균형한 조세구조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불균형한 조세구조 개혁 등 재정분권을 통해 도시 경쟁력 키워야

한편 국제사회는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도 깊다. 이에 선진 도시들은 과세권과 자주재원을 앞세워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국제적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조세구조와 제도에 얽매어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방분권의 진전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반영된 조세구조는 도시 간 경쟁력에 있어서 실탄과도 같다. 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자주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국가적 담론으로 삼고 있는 균형발전이 지방분권 논의와 충돌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 패권적 정치구조(일명 구도 정치)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큰 왜곡된 전국정당 구조로 재정분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세 비율이 높아야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도 클 거라는 의식이 숨어 있어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중앙정권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의 갈등 논리를 내세워 조세구조 조정 등 재정분권을 위한 담론을 견제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 측면에서 이미 낙후된 지역과 열악한 도시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재정조정제도다.

결국 우리사회는 국제적 경쟁 환경의 변화로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한편 도시와 지역의 균형발전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다. 이에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정조정제도도 적극 보완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내야 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 포함해야

드디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국제환경의 변화를 공감한다면 중앙정부 주도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려다 차별받는 지역이 발생하는 기존의 성장전략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정권이 들어서면 그 지역을 겨냥한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는 왜곡된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실패와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을 포함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헌법은 ‘고향과 출신’에서도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했다. 도시 경쟁력이 지방분권 실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정체성 없는 지역대표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려면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치권보다 한발 앞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할 때만이 재정분권은 실현가능하다. 서로의 분발을 촉구한다. ☺☺☺



지방분권

2017년 11월 12일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이기우 지방자치위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eekw@inha.ac.kr

I. 현행 헌법상 지방입법권의 문제점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헌법 제117조를 비롯하여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3조 등이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아래로부터 창조적인 혁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헌법이 가로막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살림살이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간섭하다 보니 막상 전국적인 큰 과제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이 법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하달한 획일화된 정책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기능장애에 시달리고, 지방정부는 수족이 묶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헌법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을 권리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헌법 제59조 등 여러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예컨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학자들 절대다수가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함은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즉,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조례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것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는 민법에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활동할 수 없도록 한 제한능력자 제도와 유사하다.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주민에게 지원 등 수혜적인 조례만 제정할 수 있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주민은 이득이 없으면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어 결국 주민의 도덕성을 타락시킨다.

2.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대로만 하라고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자치사무도 그 지침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법령의 형식으로 이미 다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정책구상에 의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치주체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 된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법령을 지방에서 베껴내는 복사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지방은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 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지방에서 더 좋은 문제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에서는 법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여야 한다.



II.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1.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보장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59조 제13조 등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조세 부과, 형벌부과 등을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유보조항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지방입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하면 지방정부는 법률로 ‘시키는 것만 해라’는 의미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도 법률에서 위임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도록 손발이 묶인다. 탄산음료가 청소년에게 유해해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치의 주체라면 자치규범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없이 대표없다는 뜻이지 반드시 중앙정부의 의회인 국회가 세금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세금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방세인 주민의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은 지방의회이지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지방의회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방의회는 법률제정권을 배제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없으며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에서는 칸톤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는 것은 헌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인 게마인데가 정한 규정(Reglement)도 법률로 보고 있다. 이에 게마인데도 다른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부과하는 규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게마인데의 규정자체가 법률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나 죄형법정주의로 인한 족쇄로부터 지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 지방정부는 비로소 지방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지방조직과 인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의문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률을 왜 조례라고 불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원래 조례는 경국대전 이후 행정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지방정부의 행정입법정도로 위상이 격하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례의 위상변화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헌법은 지방정부의 입법형식을 규정한 것이 없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비로소 조례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그 제정범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조례는 이미 위상이 매우 낮은 법형식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지방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형식도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완고한 해석론에 지방의 손발은 다시 묶이게 된다. 법률유보에 의한 지방의 행위능력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지방의 입법형식을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을 헌법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변형입법권 보장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규범충돌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은 무조건 국회의 법률과 중앙정부의 법령이 지방입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국가법령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책의 전국적 획일화를 가져오고, 아래로부터 혁신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적지 않은 논자들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아무런 내용상의 개정이 없는 표현의 변경에 불과한 무의미한 내용이다. 푸른색을 청색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표현은 바뀌어도 국가법령 우선주의를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성의 보장과 아래로부터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과 지방법령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변형입법권, “불구하고” 조항).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00 법률 제00조에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개정된 독일 헌법 제72조는 자연보호, 사냥, 공간정서, 수리, 대학입학 등의 분야에서 주는 연방법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지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법률의 우선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제안이다.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지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법률제정권을 국회에 독점시키고 있다. 독점기업이 생산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듯이 국회도 경쟁상대가 없어 입법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만든 법률이 현실과 잘 맞지 않고, 어느 지방에도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마다 다양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률로 국가법령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이나 명령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법률이나 명령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의해 다른 규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보다 좋은 법률이나 명령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도 국가의 법령에 반하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보다 나은 입법을 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 상호 간에도 보다 나은 입법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치열한 입법경쟁을 통하여 입법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위하여

조성훈 정치사법팀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빼빼로데이인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치페스티벌이 열렸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주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로, 경실련도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개혁과 국민주도의 개헌을 바라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경실련은 이날 시민들에게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개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개헌’을 설명하는 전시물을 전시하였다. 더불어 경실련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재벌개혁’,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 ‘등지내몰림’ 등의 문제를 알렸다.



그리고 전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를 하며 시민들에게 재미있게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민들 전반적으로 정답을 맞추었지만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후분양제가 뭔지에서부터 필요성까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면 후분양제가 꼭 필요하다는 반응과 후분양제 운동을 지지하는 응원의 말까지 덤으로 들을 수 있었다.

적폐 청산 딱지치기도 함께 진행됐다. 우리 사회의 5가지 주요 적폐 ‘검찰 개혁’, ‘정언 유착’, ‘재벌 개혁’, ‘방산 비리’, ‘비정규직’을 적폐 청산

딱지로 넘기는 것이다. 오랜 기간 쌓여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 적폐만큼이나 딱지가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 딱지를 넘기며 쾌감을 느꼈다. 요즘 적폐 중에 적폐라고 일컬어지는 이명박 대통령 딱지 넘기기는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

다른 부스에서는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장애인 차별 금지, 환경권·동물권 보장 등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헌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권, 동물권 등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중앙 무대에서는 김제동씨가 사회를 보는 ‘정치판을 뒤엎는 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있었다. 지난해 촛불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것들이 변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부조리와 적폐가 남아 있음을 시민들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변화시키는 데 앞장 서주길 바라는 것이 그 자리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였다.

반나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바라는 많은 목소리들이 모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제와 주장으로 열심을 다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는 시간이었다. 경실련도 딱딱한 형태로 활동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만나 유쾌하게 우리의 주장과 활동을 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정택수 정치사법팀 간사
wild@ccej.or.kr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지난 9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들을 드러낸 헌정사상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선실세에 의한 헌정유린 등 사건의 실상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나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됩니다.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설치촉구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하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한국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검찰에게는 권력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늘 따라다녔는데 특히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였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검찰은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병폐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을 가진 상시적 기관인 공수처의 설치의 성역 없는 수사를 실현하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이루는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사에 있어 독립적이며, 기소권과 수사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서 인정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중요한데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까지 제도화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의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

경실련,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고발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
seongdal@ccej.or.kr

경실련은 지난 10월 30일 부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성동탄2 지구에서 공급된 부영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이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땅과 돈, 지원 1위는 부영

그동안 부영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사업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LH가 개발해서 민간에 매각된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가장 많이 가져

〈표 1〉 공공택지 임대아파트 용지 공급 상위 5위(2000~2016) (단위: ㎡, 천 원)

순위	업체명	공급면적		공급가격	비중
		면적	비중	금액	
1	(주)부영주택 ¹⁾	713,239	15%	709,599,640	16%
2	공무원연금공단	298,535	6%	253,859,031	6%
3	(주)NH제3호공공임대개발투자회사	197,726	4%	200,161,442	4%
4	(주)NH제5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165,846	3%	206,083,210	5%
5	(주)NH제6호공공임대발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124,725	3%	158,838,080	4%
전체		4,844,958	100%	4,499,705,618	100%

주 1) (주)부영주택과 (주)부영의 합임.

자료) 2016년 국감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표 2〉 임대아파트 건설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5위 건설사

(단위: 억 원)

순위	업체명	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금액	비중	소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2013	2014	2015	2016
1	(주)부영주택	38,453	49.20%	7,221	1,045	596		1,302	4,278	31,232	13,623	4,627	11,598	1,385
2	(주)동광주택	4,062	5.20%	757					757	3,305	1,333	742	1,231	
부영계		42,515	54.40%	7,978	1,045	596		1,302	5,034	34,538	14,956	5,369	12,829	1,385
3	중흥산업개발(주)	1,971	2.50%							1,971	1,412	558		
4	(주)영무건설	1,777	2.30%	1,236	463		245		528	541		541		
5	덕진종합건설(주)	1,565	2.00%		90	140	207	372		756		562	194	
전체		78,142	100.00%	22,622	2,807	2,793	1,921	4,090	11,012	55,520	21,393	10,691	16,359	7,076

자료) 정동영 의원실 국감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간 업체는 부영이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절반 이상인 54%가 부영에 집중됐다.

하지만 수많은 택지와 기금지원의 수혜는

서민이 아닌 부영에게 돌아갔으며 부영을 재계 순위 15위까지 성장시켰다. 부영이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단기임대 후 분양전환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싼 이자로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불량아파트를

〈표 3〉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현황

(단위: 세대, 억 원)

구분	23블록					31블록					
	최초	1차	2차	3차	증감	최초	1차	2차	3차	증감	
승인일	2015.1.5	2015.4.14	2015.5.26	2015.6.25	-	2015.1.5	2015.5.11	2015.5.26	2015.6.25	-	
사업비	3,217	3,217	3,217	4,658	1,442	2,119	2,119	2,119	2,999	880	
세대수	1,316					718					-
아파트 형태	민간분양					민간분양					

자료) 화성시 사업계획승인 고시문.

건설, 입주민들에게는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떠 넘겼다.

최근 9만여 건 이상 하자발생으로 지탄받고 있는 화성동탄2지구 뿐 아니라 전주하가, 화성향남, 위례 등 수많은 부영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하자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화성동탄2지구 23블록, 31블록 아파트사업에서는 허위 원가공개로 사업비까지 수천억원 부풀려져 막대한 이득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되어, 경실련은 부영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받는다. 부영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입주자모집 단계까지 분양가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화성시에 제출,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실련이 부영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업비가 근거없이 증가하고, 원가가

〈표 4〉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심사 현황

(단위: 만 원, 평)

구분	A23			A31			A71			A72		
	신청	승인	조정	신청	승인	조정	신청	승인	조정	신청	승인	조정
택지비	470	412	(-58)	537	478	(-59)	509	504	(-5)	500	497	(-3)
건축비	직접공사비	606		622			447			434		
	간접공사비	570	54	589	52	620	(-121)	625	(-140)	51		
가산비	85	62	(-23)	74	42	(-32)	109	193	84	106	210	-104
합계	1,125	1,098	(-27)	1,200	1,161	(-39)	1,238	1,196	(-42)	1,232	1,193	(-39)

주) 신청은 분양가심사를 위해 제출한 분양가이며, 승인은 분양가 심사 후 입주자 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임.
 자료) 블록별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경되는 등 허위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영이 2015년 1월 최초로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민간분양아파트 1,316세대 건설 규모이며 사업비는 3,217억 원(세대당 2.4억 원)이다. 하지만 2015년 6월 3차 사업계획 변경에서 세대수 등 규모는 동일한데 사업비는 최초보다 1,442억 원이 증가한 4,658억 원(세대당 3.6억 원)으로 변경승인됐다. 세대당 1.2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세대당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부영은 [사업비 산출 착오(임대아파트 산출기준 적용)에 의한 변경]이라고 밝혔다. 당초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어서 임대아파트 건축비 산출기준인 표준건축비(2015년 당시 320만 원/평당)에 맞게 사업비를 산정했지만 분양아파트로 변경하면서 분양아파트 산출기준인 기본형건축비(472만 원/평당)로 다시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화성시장이 공개한 최초 사업계획승인

고시문에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분양 아파트’로 구분표시되어 있고, 사업비가 증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 제출여부도 입주자들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부영이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심사 후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분양원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도 블록별로 서로 달라 부영의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된다.

경실련이 화성시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받은 분양가심사를 위해 부영이 제출한 분양가는 평당 1,125만 원~1,238만 원이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승인 후 공개된 분양가는 분양가심사 때보다 평당 27만 원~42만 원 정도만 줄었으며, 세대당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23·31블록도 세대당 1천만 원 정도 감소했다.

블록별로 원가내역에 대한 증감여부도 크게 차이났다. 분양가심사 단계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의 원가공개 항목이 서로 달라 세부항목별 비교는 어렵지만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는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다. 23블록의 경우 택지비 평당 58만 원 감소, 공사비 평당 54만 원 증가, 가산비 평당 23만원이 감소되어 최종 승인된 공사비와 가산비는 각각 평당 624만 원, 62만 원이다. 하지만 72블록의 경우 택지비와 공사비는 각각 평당 3만원, 14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가산비는 평당 104만 원이 증가하여 최종

승인된 공사비와 가산비는 각각 평당 485만 원, 210만 원으로 23블록과는 각각 평당 139만 원, 148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31블록, 71블록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는 부영이 사실에 입각한 분양원가에 적절한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와 주변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미리 책정한 후 역으로 부풀려진 원가를 원칙없이 배분책정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조차 허위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

부영의 부풀려진 분양원가가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통과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분양가 부담도 증가했다.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 원, 세대당 1.2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의 수분양자 부담도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영은 원가를 부풀렸음에도 공사기간 단축, 불량자재 사용, 불법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의 불법시공으로 9만여 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를 건설했다.

특히 부실시공이 심각한 23블록, 31블록의

공사비는 각각 평당 624만 원, 641만 원으로 71블록, 72블록의 평당 500만 원, 485만 원보다 높았다. 이는 부영이 공사비는 부풀리고 시공원가는 낮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되는 명백한 사기혐의이다.

또한 블록별 공사비 차액만 1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23블록 1,316세대(평균 32평)에만 적용하더라도 427억 원 이상의 이득이 예상되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해당된다.

땅과 돈을 지원받아 자기 배만 불린 부영,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부영에 대한 검찰고발 이후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부영의 또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경실련에 잇따르고 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부영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를 비판했다. 그동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사회정의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부영의 이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결국은 부영 배불리기 특혜 사업이었고 이를 위해 불법행위 의혹까지 드러



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와 제도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국감장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부영 임원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도 부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부영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하며 또 다른 부영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세입자의 잘못 아닌데, 그냥 나가라?

–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도입해야 –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nari@ccej.or.kr

2009년 홍대역(공항철도) 앞 한 건물의 칼국수 식당인 '두리반'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포구청은 2006년 공항철도 홍대역사가 건립되자 중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소를 유치하기 위해 1800여 평 규모의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식당 주인은 구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사실을 모르고 2005년 임대료와 시설설치비 등 1억 원을 투자하고 입주했다. 그러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 없이 이사비 300만 원만을 받고 쫓겨나야 했다. 이들은 부당한 사업집행을 반대하며 폐쇄된 식당에 들어가 537일간 홍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장기농성을 진행했고, 사업추진 건설사로부터 배상금과 인근지역의 영업장 확보를 약속받았다. 한남동의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와 함께 홍대 두리반 식당의 투쟁은 한국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에 대한 임차인 대응의 상징이 되었다.

두 사건은 실효성 없는 법적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발생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지역이 역사·문화·예술·혁신적 상공인 등 물적·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명소화되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했던 임차상인과 문화예술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노력으로 발생한 지역활성화 효과가 건물주의 자본 이득으로 귀속되는 비정상적 구조와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잃고 획일화되면서 급속하게 쇠퇴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대형프랜차이즈의 입점제한과 고유업종 보호, 문화예술인 지원, 공유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논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낮추고, 5년인 계약갱신청구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및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도입,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5%)이 빠졌고,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도 '도입'에서 '검토'로 '후퇴'됐다.

지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현 9%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높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 개정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상가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개선을 위해 미흡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제'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 될까 우려된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가 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 최소 1년의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되, 5년까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 10조). 즉, 5년동안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속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결정되면 임대인의 계약 유지 의무가 사라지고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 보상규정이 없어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다. 손해비용을 임대인 혹은 사업의 추진 주체가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개발주의 시대 사업추진을 위해 세입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70개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 철거와 재건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기존 규정으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사업으로 임차상인을 내쫓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지역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예외를 인정하되 '퇴거보상제 도입'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여 임차인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

현행 미흡한 상가세입자 보호제도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는 과세제도는 팍 흘러 일하는 노동의 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재산권행사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인의 적절한 보상을 의무화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임차상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사업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을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비교〉

	대선 공약('17. 4)	국정과제('17. 7)	경실련 안
젠트리 피케이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상한한도 9% → 5%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5년 → 10년 확대 퇴거보상 도입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재건축 임차인 우선임차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계약갱신 요구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우선임차권 부여, 퇴거보상제 도입 검토) 환산보증금 상향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 (대형전통시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상한 한도 5%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재정비사업 퇴거보상 의무화 지역특화 위한 대형업소 입점 제한 및 특화업소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특구 지정

제빵사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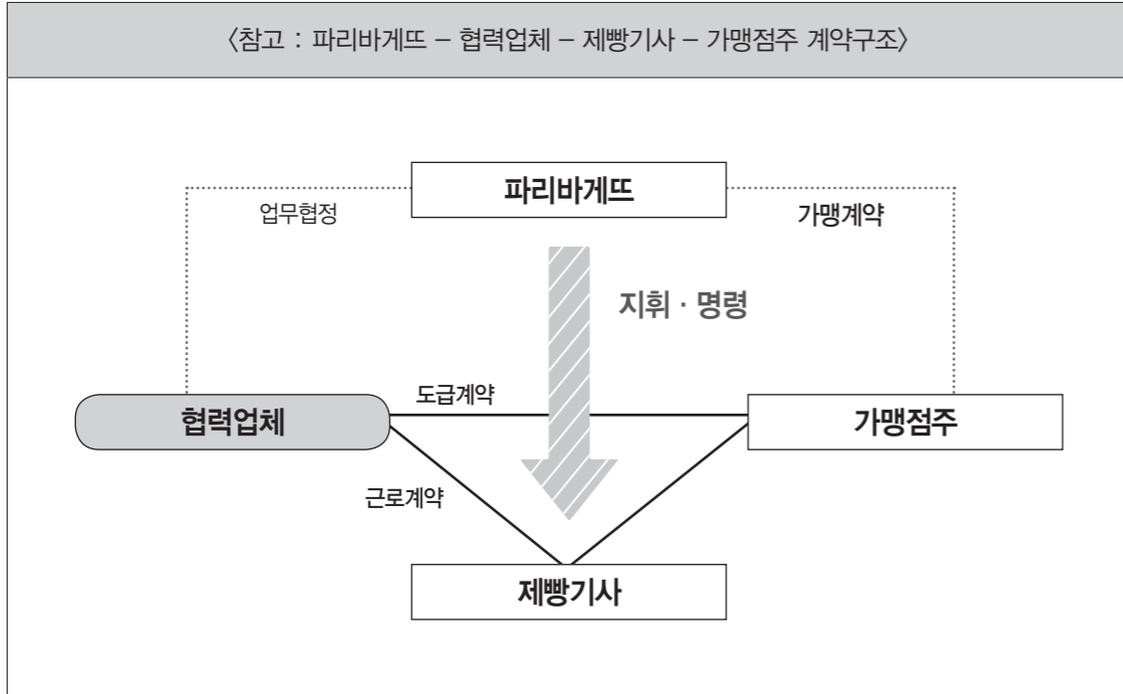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dipseo@ccej.or.kr



▲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 5,378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2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사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으며,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조치한 것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함에도 적극

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왔던 업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급여를 받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면 적법도급에 해당하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이 성립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을 기한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여전히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는 시정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소송을 준비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해당사업체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관련 판례 등에 입각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여론을 호도하는 꾀수를 부리며 지난한 소송 전에 돌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시작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다. 해당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근로감독결과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한 것임을 인정하고 해당부처의 시정지시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왜곡된 노동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사업장, 불법파견이 만연한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이번에 시정조치된 파리바게뜨 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다른 업계에서도 유사한 기형적 간접고용 구조가 넘쳐난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파견법 등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와 도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불법파견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단에서도 사건별 적응을 넘어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 프랜차이즈 빵집의 가맹점주는 고용불안의 벼랑끝에 내몰려 가용재산을 다 털어 '사장님'이 된 우리의 부모님들이기도 하고(물론 상대적으로 덜 열악할 것이긴 하지만), 새벽부터 기계처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빵을 만들어내는 제빵기사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기도 하다. 상생은 가능하다. 파리바게뜨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꾀수를 버려야 한다. 대안을 운운하기에 앞서 파리바게뜨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즉각 제빵기사들에 대한 고용에 나서라. ☺☺



대한민국 재벌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 세 번째 경제민주화 강좌 살펴보기

이성윤 경제정책팀 간사
pain2o@ccej.or.kr



▲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최정표 교수, '재벌 더 비기닝: 재벌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과거 정부는 재벌을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펼쳤고, 그에 발맞춰 성장한 재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성장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경유착,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등등 재벌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재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의연구소는 10월 26일부터 세 번째 경제민주화 강좌인 “대한민국 재벌이 사는 법-재벌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재벌분야 전문가인 최정표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조연성 교수(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최경영 기자(뉴스타파), 김종보 변호사(민변)를 모시고,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두 개의 강의를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최정표 교수는 역대 정부의 재벌 정책을 통해 재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정표 교수는 재벌이 성장할 수 있었던 4가지 요인으로 정치권력에게 받은 특혜, 상품시장의 독점권 보장, 저임금을 통한 노동력 착취,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후세대로 가

면서 창업자가 가졌던 기업가정신마저 사라지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문제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로 재벌들의 저항, 정치인의 의지부족, 국민의 무관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벌들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열망이 있어 재벌개혁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연성 교수가 재벌의 상속방법을 설명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재벌의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조연성 교수는 삼성의 순환출자를 통한 재산상속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가 삼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 이어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라는 방식이 만연해지면서 ‘사업기회의 유용’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진정한 자본주의의 경쟁시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

2017년 11월 12일



▲ 두 번째 시간에는 조연성 교수가 '진화하는 재벌 상속의 비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박상인 교수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재벌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최경영 기자는 재벌과 언론의 관계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보 변호사가 재벌의 갑질사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경실련은 시민

과 함께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번에 진행된 강의들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구미 민간공원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gmccej@daum.net

도시재생과 도시 다이어트 위축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개발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구밀집도가 높는데 비해 도시공원 비율이 낮은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인구밀집도가 낮는데 비해 도시공원 비율이 높은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말씀이다. 민간개발업체가 30% 보상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접근성 좋고 활용도가 높아 꼭 필요한 도심의 작은 공원은 외면한 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가능한 외곽지의 돈 되는 노른자위 땅만 노리기 때문이다. 산을 절토한 곳에 들어서는 입지 좋은 공원 아파트가 쏟아지면, 도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에 직격탄이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것이고, 전체 시민들의 집값도 폭락시킬 것이다.

내가 탐나면 남도 탐나는 법, 시민이 선호하는 공익과 개발업체가 선호하는 사익의 충돌은 태생적으로 불가피한 문제다. 특히 실내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외곽지 민간공원은 공익적인

시민공원이 아니라, 사실상 민자 아파트 전용공원이다. 이렇게 공익적 가치가 밀리면 한순간에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게 민간공원의 본질이다! 이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전국의 지역경실련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인구 절벽 시대와 지방중소도시 축소도시화 추세에 대응하는 도시 다이어트 이론에 따라 외곽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향후 인구 급감 때 발생할 도시기반시설 유지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시민들의 몫이 되고,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릴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공원 아닌 민자아파트 전용공원

구미시는 2016년 9월 전후로 2조 원대 민간공원 3곳을 거의 동시에 추진했다.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은 65만6천194㎡에 8천202억 원을 들여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부지 30%에 29층 아파트 3,493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꽃동산 민간공원사업은 1조165억 원으로 75만㎡를 사들여

30% 부지에 45층 3,955세대를 짓고, 동락공원 2지구 민간조성사업은 8만3천781㎡에 3천 55억 원을 들여 40층 1,020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이다. 총 2조1천422억 원을 들여 아파트 8,508세대를 2020년 일시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역경실련에서 민간공원 사업에 대해 유의해 살펴볼 점은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 주민복지센터, 피톤치드원, 숲속놀이터, 분수 등 공원시설의 이용자 다수가 일반 시민들인지, 아니면 민간공원으로 들어설 민자 아파트 주민들인지 여부다. 구미 민간공원의 경우 중앙공원과 동락공원 2지구는 기존 주거지와 떨어진 곳 이어서 완전히 민자 아파트 전용공원이며, 꽃동산 공원과 해당지역 상단부여서 다수 주민들과 떨어진 데다, 스포츠센터를 3,955세대 대규모 단지 담장에 붙여서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 아파트 전용공원이다. 무엇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길쭉한 산(공원)을 두 동강 낸 공원 가운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중앙공원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난개발은 전국 첫 사례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 등 주요 공원시설을 민자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민간공원을 시민의 공원이 아니라 민자 아파트 전용공원으로 둔갑시키는 사기다! 민간개발업체는 반드시 “아토피 예방에 좋은 숲 공원과 실내수영장을 낀 숲세권 아파트”식으로 분양 홍보에 이용할 것이고, 아파트가

완판 되면서 민간업체는 배를 채울 것이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원을 부동산 투기업체에 홀라당 갖다 바친, 되레 공원을 빼앗긴 허탈감” 뿐일 것이다.

협업으로 저지시켜

3선 퇴임 1년을 앞둔 42만 중소도시 시장이 2조 원대 토목건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마당에, ‘공원 해제 시 난개발’이 된다면서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남유진 구미시장의 주된 논리조차 말짱 거짓말이다.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매입을 하지 못하면 종전 용도로 환원되는데, 구미 민간공원 3곳 모두 자연녹지이므로 ‘건폐율 20%,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난개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구미시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이 37.08㎡로서 법적 기준 6㎡ 이상, 경북 9.30㎡(2014), 포항시 16.09㎡(2015), 대구시 4.50㎡(2014), 서울시 8.30㎡(2014), 전국 평균 8.60㎡(2014)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특혜성 난개발과 집값을 폭락시키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감수하면서까지 민간공원을 개발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미시가 반대여론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호응한 것은 ‘민간공원 8,500세대 공급=집값 폭락’ 반대논리였다. 최근 구미지역 아파트 값이 모두 수천만 원씩 내렸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반대논리이다. 기존 미분양



▲ 민간공원 저지 구미시의회 현관 집회(2017.10.31)

1천여 세대와 사업 승인 6,700세대에도 추가로 2020년 8,500세대 일시 공급은 42만 중소도시엔 ‘아파트 폭탄’급의 과잉공급이기 때문이다.

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꽃동산 공원 탈락업체가 심사 비리를 주장하면서 행정소송도 모자라 검찰에 진정서까지 냈고, 중앙공원은 구미시장 고교 동기와 구미시 퇴직 건설도시국장이 우선협상대상 선정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이곳 탈락업체도 심사 비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심사비리와 특혜성 의혹이 확산되면서 구미시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는 추세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6월부터 TBC(대구방송), 반대 시의원, 민주당 구미읍당협, 원평주공재건축 비대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10월 31일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의 구미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저지에 적극

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에 제보된 심사 자료집을 공유하면서 연속 3일 심층 기사를 내보낸 TBC와, 반대 선봉 역할을 한 김근아·김복자 시의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 6월 1차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을 때는 반대 시의원들이 다수였으나 구미시와 민간개발업체의 로비로 찬성으로 역전됐고, 10월 31일까지 8일간의 시청 정문 일인시위와 집회 및 찬성 주도 시의원들에 대한 폭로 등을 통해 재역전시켜 “시민여론 조사를 거쳐 기명 공개투표로 결정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구미 민간공원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민간개발업체가 김복자 시의원과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연말이나 내년 초 예정 시민여론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민간공원 논란이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보다 더 큰 화젯거리일 정도로 규모가 큰 현안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성공사례이다. ☺☺☺

도시경실련

2017년 11월 12일

팍팍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아직 꿈꾸고 있습니다.

- 광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

박수민
광주경실련 기획부장
psmho@nate.com



얼마 전 함께 청년부채 상담을 하는 친구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상담했던 한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차 상담 이후 어떻게 상담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었는데 2차 상담 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담을 미뤄야겠다는 연락을 받아 마음이 좋지 않다는 문자였습니다. 붕어빵 2천 원어치를 사서 신나게 길을 걷던 중 받은 문자에 눈이 뜨겨워져 순간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 친구는 어머니에게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20% 넘는 이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바리스타를 꿈꾸는 평범한 이 청년에게 갑자기 600만 원의 빚이 생긴 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 과정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되고 또 병원비를 내기 위해 빚을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모두 한 달 내 일어난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 건지. 직업도 없는 이 친구에게 600만 원이라는 빚을 내게 한 아버지의 배우자라는 그 어른에게도 또 20%가 넘는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친절한 얼굴로 포장된 대부업체에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고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빚은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광주경실련에서 '청년부채ZERO캠페인' 사업을 시작한 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라는 제목을 붙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날 패널로 참여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한민국을 두고 경제대국이라고 말하고 버려지는 음식들도 많고 길거리엔 값비싼 차들이 다니고 겉으로는 누구도 어떤 경제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그래서 자신 역시 학자금 부채에 대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모자라서 발생한 부끄러운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를 보면 학비를 제외하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7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전기요금 등 7만 원, 식비 15만 원, 교통비 6만 원, 핸드폰 요금 5만 원. 최소한의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혹은 데이트를 하는 것도 사치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청년의 이야기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운동으로 시작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이 청년이 자신의 학자금 부채를 개인의 부끄러운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일반 청년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어느 정도일까 아득했습니다.

광주시가 청년정책 기본 수립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부채의 평균은 1,054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물론 얼마의 부채를 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청년부채는 단순히 숫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광주경실련에서 청년부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부채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청년들의 고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채 ZERO 캠페인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고립된 청년들이 부채의 고리를 끊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캠페인으로 2015년 4월 서울 청춘희년네트워크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광주경실련의 사업은 지원 사업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을 진행하면

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 끌어 올리는 작업 과정에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손을 뻗어 잡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수입 없이 학자금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결국 식비와 주거라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기하게 되고 여기에 가난과 빚을 숨기면서 심리적 네트워크가 끊어져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언론과 사회에서 이 친구들에게 이름 붙인 삼포세대 사포세대라는 말로는 이들의 삶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팍팍한 삶 속에서도 계속 꿈을 꾸고 가족과의 평범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청년이 더 이상 없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 소비’ 강좌를 마치고...

유병욱
수원경실련 부장
yerangbw@naver.com



▲ 지난 10월 26일(목) 경실련경기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 소비’ 강좌가 수원 정자3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 옷을 사 입어야 한다. 신발도 사야 건 나도 살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한다. 굶지 않고 가방도 사야한다. 여하간 살기 위해서는 소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광주경실련

2017년 11. 12월호

면야 쓰고 싶은 대로 걱정 없이 쓰면 되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 사소한 것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늘 나름의 소비 기준을 고민한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한정된 여건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말이다.

그래도 나를 고민하며 살다보니 적은 급여로 사는 가운데서도 마이너스는 내본 적이 없다. 나름 합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 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협에서 주관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윤리적 소비’ 강좌를 들으면서 조금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사실 도덕적이니 윤리적이니 하는 표현을 나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주제도 처음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지극히 사적인 활동인 소비행위조차도 도덕과 윤리를 강요받아야 하고 눈치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도덕성과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강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 많이 있었다.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협동 조합 등은 이미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많이 접해본 내용이다.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강사의 진행이 매우 좋았다. 무엇보다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여러 이론적 근거들을 많이 준비해온 덕에 내용의 깊이가 더욱 깊게 느껴졌다. 같은 내용의 강의라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연구했는가에 따라 강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강의를 통해 일관적으로 전해진 핵심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소비’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윤리적 소비라고 해서 마치 성인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없이 소비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소비하자는 것이다. 내가 먹는 커피의 콩을 재배하는 지구 반대편 어느 농장의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사먹기 전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자는 거다. 물론 고민 없이 사먹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판받을 이유는 되지 않겠지만, 한 번만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주는 윤리적 소비가 된다.

윤리적이란 표현은,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기도 하다.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소비의 양태가 존재하고, 그것 이외의 활동은 모두 비윤리적인 소비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비윤리적으로 만드는 소비가 되고 말 것이다. 무엇이 윤리적인가, 무엇이 도덕적인가, 무엇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는 소비인가, 사실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강의의 내용과는 또 다른 윤리적 소비가 분명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에게 윤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는가.’라는 고민은 누구라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판단하고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윤리적인 소비인가 따지기 전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비 문화는 충분히 달라질 것이다.

이 강연은 그러한 논의를 위해, 아직 모르는 시민들에게 고민의 계기를 던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더 나아가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만들고 실천하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



[회원 인터뷰] 언론투쟁 현장에서 임장원 회원을 만나다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이번 회원 인터뷰는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아나운서, 앵커, 특파원 등을 거치며 20년 넘게 언론인으로 활약하시다 지금은 KBS 파업에 참여하며 언론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임장원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방송국이 총파업 하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결방하는 것부터 생각해 아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또 파업하나보다 했지

요. 하지만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권력과 결합되었던 국영방송의 파행이 드러나면서 언론 적폐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KBS, MBC 언론인과 방송국 노동자들이 청와대 외압으로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긴 시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투쟁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임장원 회원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이번 파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A. 파업의 목표는 고대영 사장의 퇴진입니다.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또 내부 구성원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보도를 해왔고,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저항하는 제작진에게는 인사상의 보복이나 징계를 일삼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조직의 토론 문화가 죽었고, 건강한 저널리즘은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는 ‘땡북’ 뉴스(북한 관련 뉴스가 많다는)라는 비아냥을 받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종편 채널들의 연이은 특종을 쳐다보기만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야유를 받고, 쫓겨나고, 매체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수정권이 집권한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특히 현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극에 달했다는 게 다수 KBS 구성원들의 평가입니다.



▲ 지난 11월 8일 여의도 KBS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공범자들 영화를 보거나 투쟁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분들은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파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세요?

A.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점은 KBS의 존재감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KBS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공영방송 파업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방송 매체가 워낙 많다보니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수신료를

JTBC에 주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KBS 뉴스에 대한 기대 자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양비론적 인식도 안타깝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 안 맞는 공영방송 사장은 어차피 쫓아내는 것 아니냐,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다,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 KBS 구성원들이 월급 못 받는 파업을 하면서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고 사장이 저널리즘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면, 고 사장이 ‘보수



▲ 임장원 회장은 투쟁의 최종 목표는 고대영 사장의 퇴진이 아니라 KBS가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수신료를 내고 싶은 공영방송'으로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색채의 인물'이라는 이유로 현 정권이 쫓아 내려는 시도를 할 경우 KBS 구성원들은 오히려 정권에 맞서 사장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Q. 방송문화진흥회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건을 가결하면서 MBC 사태는 해결될 실마리가 보여 희망적인데, KBS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언론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A. 지난 9년간의 MBC는 워낙 '막장'으로 망가져왔기 때문에 해직 언론인도 여럿 나왔구요.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높았고,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MBC의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KBS가 관심을 덜 받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KBS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기사가 나오는 배경은 이런 겁니다. KBS와 MBC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거대 야당이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다 보니 현 정권 입장에서는 비록 그것이 공영방송 언론인 다수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이라 해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가, KBS의 경우 사장 임기가 1년 남아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교체를 서두를 큰 실익(?)도 없으니,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야당의 '방송 장악'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 정도로 받을 빼고 싶은 셈법도 나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업 투쟁 중인 다수 KBS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정권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정말 KBS는 이렇게 1년을 더 가도 좋은 것인지,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두드리는 정치권에 KBS의 운명을 맡겨놔도 되는 것인지... 수신료를 내는 시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다음은 KBS 정상화다'를 크게 외쳐주셔야 KBS 개혁이 앞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Q. 파업 이후의 방향과 투쟁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제가 노조 집행부가 아니라서 투쟁 계획은 드릴 말씀이 없구요,^^;; 중요한 건 고대영 사장의 퇴진이 투쟁의 최종 목표가 아니란 겁니다. 투쟁의 최종 목표는 리셋 KBS, 수신료를 내고 싶어하는 공영방송의 건설이구요, 리더십 교체는 그 수단이자, 디딤돌일 뿐입니다.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보도부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공짜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10대부터 노령층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시대에 우리는 왜 수신료를 내고 KBS 뉴스를 봐야 하는가에 대해 답이 되는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민간부문)에 맡겨놓으면 나오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뉴스가 넘쳐나지만 검색을 해보면 쟁점이 되는 사안을 양비론적으로 늘어놓는 뉴스만 나옵니다. 양쪽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 검증하거나 의혹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뉴스는 가물에 콩 나듯 볼 수 있어요. 민영 언론사들은 기자들에게 기사 한 건을 오랫동안 취재할 시간을 줄 여력이 없고, 광고주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을 끝까지 파고 들게 할 수도 없거든요. 수신료가 중요 재원인 KBS는 구조적으로 '끝장 기사쓰기'가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언론사입니다.

Q. 기자님은 방송기자인데, 최근에는 온라인에 주로 삼성 관련 심층기사를 써서 반향을 일으키곤 하지 않았나요?

A. 현 고대영 사장 체제가 출범한 직후인 2015년 12월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를 9시뉴스에서 다뤄달라는 기자협회장의 호소를 보도본부 간부들이 부당한 압력이라 편집권 침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이 있었죠. 저는 당시 경인방송센터장으로 부장급 간부였는데, 마지못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성명 참여를 철회하고 보직을 사퇴해버렸어요. 그 이후 인천지국에 평가자로 발령받아 '유배' 생활을 하다가 디지털뉴스부로 옮겨왔죠. 디지털뉴스부도 일종의 유배지라 '진보 성향' 기자들이 모여



▲ 임장원 회원님은 수신료를 내는 시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쳐주길 당부했습니다.

있는데, 온라인 쪽은 수뇌부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 오히려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를 마감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제도권 언론이 잘 안 쓰는 기사, 곱씹기만 하는 기사, 검증이 부족한 이슈를 들여다보고 1주일에 하나 정도만 심층적으로 씁니다. 건수로는 40여 개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나 섹션별 주요 뉴스 코너에 노출되며 격려와 제보 메일을 많이 받는 등 개인적

으로는 뉴스 앵커 시절보다 더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시다.

제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기자에게 시간과 자유를 주면 더 깊은 기사,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죠. KBS 기자 수백 명을 시청률과 제작 경쟁에서 풀어주고 영역을 없애주고 시간과 자유를 주면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Q. 이번 사태를 공영방송 이사회 선출 방식 구조가 문제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당 추천 이사가 방송국 사장을 뽑고 중요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구조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맞는 말입니다. 당연하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정치권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입장이 달라서 여지껏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이야 말로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KBS 이사진은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MBC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은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지요. 현 여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당과 야당의 추천 이사 수를 각각 7대6으로 해 불균형을 최대한 축소하고, 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서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여야 타협의 산물로 무색무취한 사람이 공영방송 수장으로 선임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야 모두가 ‘오케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보고 어느 쪽에도 날을 세우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게 무색무취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치권의 영향력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사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포함해 대규모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의 2/3가 찬성하는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Q. 회원 인터뷰만큼 2006년부터 경실련 회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신데,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경실련은 창립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87학번이에요. 6월 민주화항쟁 세대라고도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교 출석하는 게 죄스럽고 출석하는 것보다 거리에 나가는 게 익숙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경실련이 생겼고,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실련 활동들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경실련 간사를 꿈꿨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동조했지만 운동권에 참여하지는 않고 변두리에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변혁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노동운동이라든가 야학에 참여할 용기는 못 내고 있는데, 마침 시민사회단체라는 공간이 좋아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주저하게 된 거죠. 저희 집이 가난해요. 경실련 가면 가난할 거 같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월급받는 게 뭘까 했을 때 ‘언론’일을 하게 됐어요. 실제 기자 생활 하면서도 시민단체

지향과 언론의 지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회변혁과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언론이 조금 더 제도권에 있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비겁하게 조금 더 안정된 기반이 있는 곳으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늘 존경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언론활동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Q. 경실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경실련이 해 온 여러 가지 활동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아파트 값 문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정의 실천이라고 하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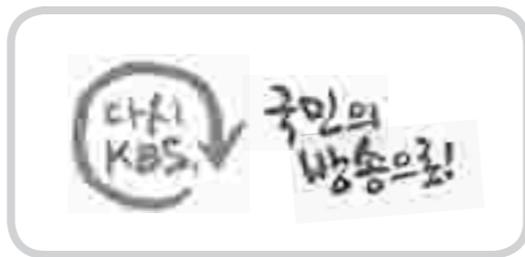
단, 이제 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지만 갑입니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권위있는 시민단체의 행동이나 발언 하나하나가 이미 언론보다 더 사람들의 신뢰를 받거든요. 조선일보가 말하면 안 믿어도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가 말하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초에도 경실련 보도자료 관련해서 오류인가 의도적 과장인가 확인해보고 싶어 담당자와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

논리적으로 과장된 부분들도 보였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진보언론에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세우는 주장이라고 해서 정치(精緻)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기자로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책을 편집하는 과정 중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임시이사회에서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MBC 파업 71일만입니다. 임직원 회원님 말처럼 사장 해임이 최종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진실을 은폐하며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한 왜곡되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세워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론을 통해 여러 소식을 접합니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야겠습니다. ☺☺



[혜화동 이야기] 학림다방 인터뷰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ji78@ccej.or.kr

혜화동에는 학림다방이 있습니다. 학림다방은 대학로의 명소일 뿐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 예술가와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경실련이 창립된 1989년보다 33년 전인 1956년 옛 서울대 문리대 건너편에 문을 연 학림다방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의 토론 장소는 물론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예술계 인사들의 단골다방으로 지금도 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이 대학생들의 첫 모임 장소가 대학로 학림다방이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가까이 있었지만 특별한 인연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잘 소개하고 싶어 4대 학림지기인 이충열 사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4대 학림지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학림지기를 하게 되셨는지, 학림다방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있고, 유선방송 연결해서 음악을 틀어주던를 거치면서 주변의 권유로 나처럼 모자라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A. 1987년 학림다방을 인수해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저는 서울대 출신도 학생운동권 출신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지은 원래 건물은 지하철 4호선 공사를 하면서 헐리고, 시에서 보상해줘서 다시 건물을 세웠어요. 원래 위치에서 조금 변화도 있었고, 학림이 학림답지 못한 시기(경양식 레스토랑처럼 나비넥타이 맨 웨이터들이

Q.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림다방 메뉴는?

A. 손님들한테 맛있는 거 팔아야지, 맛있는 거 팔면 안 되죠. 다 맛있지만 학림만의 치즈 케이크가 참 맛있지요. 비엔나커피가 유명한데, 비엔나커피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강남의 사모님들이 대학로에서 연극 보고 비엔나커피 마시고 가는 게 코스같은



▲ 학림다방은 부모 또는 자녀가 함께 오거나, 20대와 60~70대가 등을 맞대고 담소 나누는 풍경이 자연스러운 곳이다.

시절이 있었죠. 7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연속극에 비엔나 커피 마시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비엔나커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지요.

Q. 찾아왔던 손님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은?

A. 30년 넘게 하면서 먹고 살았으니 돈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었다는 게 학림다방 운영하면서의 큰 행운이에요. 어느 특정인을 말하긴 어렵네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수도 없이 많아서.

Q. 자체 커피공방에 로스터기를 설치해 생두를 선별·조합해서 커피를 볶아내고 하루에 스무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며 연구한 끝에 학림만의 독특하고 변함없는 맛을 찾아냈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변하지 않을 것도 있고 변해야 할 것도 있어요. 메뉴랄까 이런 것들은 새롭게 변해야지 옛날에 이랬으니까 계속 이것만 하면 망해요. 커피는 로스팅을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2호점인데, 2호점 들어오기 전에도 로스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글썸, 커피철학까지는 모르겠고,



▲ 전직 사진가셨지만, 정작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말씀 도중 어렵게 한 컷 찍은 이충열 대표님(왼쪽)

요사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커피가 너무 유별나지는 거 같아요. 음식들도 경제가 나아질수록 퀄리티 좋은 것들 찾게 되듯이 커피도 똑같은 거 같아요. 인스턴트 먹다가 원두커피 먹고, 더 스페셜한 걸 먹게 되는데 음료고 기호식품인데, 너무들 유난을 떠나는 느낌이 들어요. 커피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음식처럼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요.

Q. 대학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점포들을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대학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쉽게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저게 될 거 같으면 금새 바꾸고 조금만 유행에 지나면 다른 거 다른 거, 대학로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같은데 글썸 별로 썩 좋아보이지 않아요. 나는 유행에 민감하게 기웃거리지 않다보니 대학로에 30년 넘게 있어도 주변에 가게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어요. 욕심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욕심이 있어야 추진력도 생기고 장사



▲ 이충열 대표님은 학림다방 뒤편에 자리한 학림커피에서 커피 로스팅도 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기도 한다.



▲ 학림다방은 음악파일로 음악을 재생하지 않고, LP판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래된 LP판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든다.

라는 게 항시 수익을 생각해야 하지만 마이너스 크게 안 되면 자기 만족하면서 해야 가게들도 오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너무 들 다 들떠 있어요.

Q. 학림다방도 임대료가 오를 거 같은데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면서는 어떻게 운 좋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버텨는데 앞으로는 사회가 그런 것들을 지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해요. 이제는 개인

이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집 주인이 지금은 나이도 많으시고 돈도 있고 하셔서 괜찮은 거지, 돌아가시고 상속되거나 주인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가 가게를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건 사회가 그렇게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요. 자영업자들이 해보니까 99%는 망하는 거 같아요. 임대료 내고 하면 사람 쓰고 그런 건 못해요. 가족들이 하고, 자기 인건비 까먹고, 그러다보면 뭔가 재료에

부실해지고 그러다보면 손님들 안가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Q. 2014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건물 전체가 영구 보존구역으로도 지정되었는데,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미래유산 선정됐다고 하는데, 치적쌓기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돈이나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해가는 것들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거나 다른 가게들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뭔가 제도개선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없이 다 지정해놓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모르는데 지정해놓고, 동판 하나 세워주고, 계속 인터뷰 하자고 연락오고 하는데 뭘질 모르겠어요. 아직은 홍보용 수준 같아요. 예전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 있어요. 그 집은 진짜 모범음식점이었는데 지금은 다 모범음식점이에요.

아름답게 슬프다

박지호 사회정책팀 간사
jhpark@ccej.or.kr

Q. 경실련 또는 시민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정말로 집주인들이 부담감 가지고 마음대로 가게를 바꿀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여기는 정말 소중한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 되면 집주인들도 자제가 되겠지요. 사회가 지켜야지 이제 개인이 열심히 해보려고 소신을 갖고 해도 안돼요.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소중히 지켜가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Q.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A. 별그대 같은 경우도 우리는 부수입 올릴까 내심 기대했었는데 나중에 촬영하고 나서 저가여행상품 만들어가지고 중국관광객들이 관광버스 쪽 세워놓고는 무대기로 와서 사진찍고 가고 아주 곤란했어요. 관광공사랑 서울시에 전화해서 따지고 그랬죠. 물건 파는 거였으면 대박났을텐데. ㅎㅎ 차를 한잔씩 마셔야 하는데 사진만 찍고 우르르 가버리고. 아주 난리였죠. 드라마나 언론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게 막 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인터뷰 안하고 있는데. 에이. 경실련 뭐 이런 거창한데서 와가지고, 민주화의 상징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데모가 끝나는 시점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개인주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운동권이나 민주화의 장소로서의 이미지는 많이 없었는데 나중에

검색기능이 발달하면서 여기가 어떤 곳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다시 알려졌죠.

Q. 새로운 계획들 있으세요?

A. 그전 같은 경우는 50주년 때 김정환 시인이 서두르고 그래서 1주일 동안 예술가들이 일일사장 하는 행사도 하긴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안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들 나이 들어서... 학림 마지막 세대들이 60대 후반 들이니까.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로 계승이 돼 가야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해나가야 학림도 100년 가고, 계속 갈 수 있어요. 대충 해가지고는 오래 못 버텨요. 자생력을 항상 가져야지. 학림의 브랜드가치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너무 장삿속 아니고 잘 이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하면 좋겠어요.

.....
순박하고 선한 어르신을 만나볼 수 있어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르르 몰려간 간사들에게 손수 내리신 커피도 대접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돈이 된다 하면 어느 도시든 똑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는 시대에 학림다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이웃으로 역사와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가자는 마음 나누고 왔습니다.
ööö



▲ 1973년에 개관한 반 고흐 미술관은 그의 작품 약 7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입장권마저 아름답다.

유럽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 좋지 않다.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을 정도.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자의반 타의반 유럽으로 떠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풍차. 튜립. 운하. "잘못은 우리별에 있어"에서 그들이 함께 떠난 그곳. 이제 내가 네덜란드에 대해 알고 있고 떠올릴 수 있는 전부이다. 하지만 이번에 만나게 된 한 공간이 아니 인물이 네덜란드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 3. 30. ~ 1890. 7. 29.) 그를 전혀 모르진 않았다. 과거 다른 공간에서 그의 작품 다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때도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의 우울이, 슬픔이 좋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프랑스스럽다(?). 한국에서 만난 전시도 그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당시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했다. 그래서일까. 그와 네덜란드를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는다. 들어왔던 게이트로 다시 나가면서 끝까지 감정을 정리한다. 압도당한다. 아니 표현이 부족하다. 환하게 슬프다. 아직도 부족하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슬프다. 그러나 아름답다.

쉽게 연결 짓지 못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죽었다. 그에 대한 기억이 프랑스에 치우쳐 있는 건 내가 그의 죽음에 더욱 더 무언가를 느끼고 받아들였기 때문일까.



출처 : 반 고흐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vangoghmuseum.nl/>)

Sunflower

그의 우울, 슬픔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다가 가게 도와준 그림이다. 고흐는 생전에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싶다. 1889년에 그린 15송이의 해바라기를 보고 있으니 처음엔 당당함이 전해졌다.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여실히 느껴진다. 꽃병에 쓰여진 “Vincent”는 단순히 작가의 서명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장치가 아닐까 싶다.

그때 함께인 친구가 말한다. 슬프다고. “자신의 안에는 그림 속 여러 해바라기의 모습처럼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사람들은(피팍하고 우울한) 단면만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친구의 이야길 듣고 다시 그림을 바라보니 당당해 보이던 그의 서명이 슬퍼지고 당당해보이던 해바라기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일부러 바로 서 있는 빈센트 반 고흐로 보인다. 세상에 자신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던 그의 감정이 스며든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서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모든 작품을 다 보고 다시 한 번 해바라기를 찾았다. 그의 슬픔을 온 마음에 새기며.

Almond Blossom

1층부터 감정이 쪽 끌어들려져 해바라기를 건너 이 그림 앞에서 광하고 터진다. 마치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같다. 환희다. 마지막 층에서 만난 Almond Blossom은 1890년에 그려졌다. 정신병원에서 힘들게 지내던 날들 속에서 그는 아름답고 생명이 피어나는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조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이라는 기쁨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만 그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더군다나 장거리 여행은 허락되지 않는다. 동생 테오는 “아기가 언제나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라며 아이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짓는다. 빈센트 반 고흐는 조카가 자신처럼 고독하고 우울한 삶을 살까봐 우려하며 만류하기도 했지만 사실 매우 기뻐다. 조카의 출생과 자신의 이름을 따라 짓는다는 소식은 그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슬픔과 똑같이 빈센트 반 고흐의 행복과 웃음



출처 : 반 고흐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vangoghmuseum.nl/>)

이 온전히 전해진다. 슬픔이 가득했던 마음속에 한 송이의 아몬드 나무 꽃이 피어난다. 아몬드 나무의 꽃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진다. 구름 가득한 가을 속의 네덜란드인데 갑자기 봄이 된다. 하늘색이라는 단어로 저 하늘을 표현하기란 너무 어렵다. 하지만 그림 속 하늘이 진짜 하늘이다. 봄이다. 슬픔 이후 봄. 또 다시 감정이 폭발한다.

러빙 빈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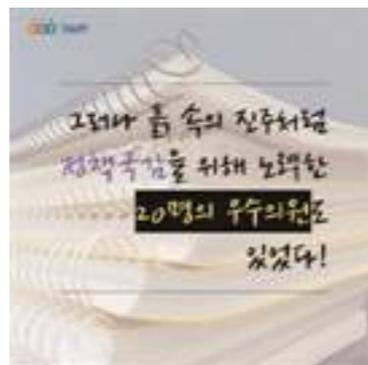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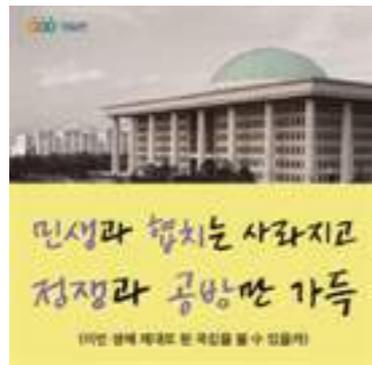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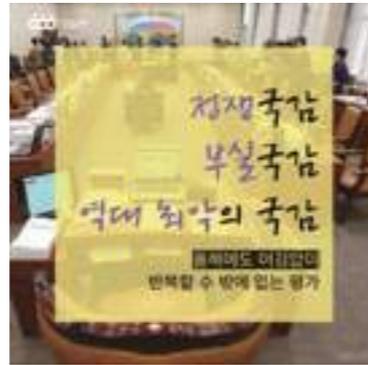
네덜란드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지만,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난 시간들은 가장 강력한 추억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제 누군가에게 네덜란드를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것 같다. 빈센트 반 고흐의 나라라고...

2017년 11월 9일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세계 최초 유화 애니메이션이다. 제작 기간 10년, 영화 1초를 표현하기 위해 10일을 그렸다는 홍보 문구보다 영화 속 한 대사가 날 영화관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당신은 그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나 궁금해 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선 얼마나 알죠” 빈센트 반 고흐의 우울과 죽음만 알고 있던 나에게 던지는 물음 같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계절은 겨울로 가겠지만 나에게 다시 봄이 시작될 것 같다. 글을 쓰며 그날의 사진을 다시 돌아보며 그의 그림을 다시 바라보니 금방 봄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다. 빈센트 반 고흐는 나에게 정말 아름답게 슬프다. 추운 봄이다. 

2017년 국정감사 평가

유애지 홍보팀 간사
aejyu@ccej.or.kr



2017년 국정감사 평가

유애지 홍보팀 간사
aejyu@ccej.or.kr



2017년 국정감사 평가

유애지 홍보팀 간사
aejiyu@ccej.or.kr

정의당 김종연 의원
군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처우 개선, 폭력드러냄 피해, 군피어 문제, 방산비리 K-FX 분담비율 문제

더민주 이철희 의원
군사어비사령부 댓글공작, 내부고발자 징계, 방산비리

더민주 박선현 의원
백남기 농민 사건, 선거법 위반 소탕공무원 건강실태, 소탕공무원 재해안정률, 경찰 징계

더민주 이재정 의원
정계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집회시위 무분별한 대응,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전일반인권행위자의 서훈 취소

더민주 박한주 의원
발생신조장제 부진, 원산지 표시제 위반, 농가소득 하락, 농산물 수입관세

국민의당 강주홍 의원
수확기 앞길 안정화 대책, 농업융합회 역할 부족, 채수부 지원관리와 감사 부실, 한미FTA재협상 농업인 배제

2017년 국정감사 평가

유애지 홍보팀 간사
aejiyu@ccej.or.kr

더민주 김경수 의원
산업동맹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케아 리콜회수물 비리, 전기세 복지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종료, 청년상업 창업지원사업 실패

보건복지위 정의당 한소화 의원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피약물 온라인 불법 판매, 원장중심 응급의료체계 정비,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 지역격차

더민주 전승숙 의원
심평원 국민건강정보 민간회사에 판매, 국민연금 임대계속가입제도 문제,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문제, 식약처의 불공명한 행정처분

더민주 강병원 의원
현대위아 불법파견, 건설회사 산업재해 문제,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전국 대기질오염물담배흡양

더민주 박한연 의원
공공보육 확대, 키스-기대를 확대, 내수용 임금계보

국민의당 김동연 의원
유보당에 도입, 교육복지 차등보조, 부안지역, 인천공항 철도역사

국민의당 김동연 의원
유보당에 도입, 교육복지 차등보조, 부안지역, 인천공항 철도역사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7. 09

- 09.26**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 09.27**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09.28**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와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②]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09.29**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2017. 10

- 10.11**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폐기하라
- 10.12**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
- 10.13**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기자회견 개최
탄핵이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 올랐다
- 10.16**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임대아파트 주택도시보증금의 54%, 부영이 차지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제20차 RCEP 인천 협상, 더 이상의 비밀주의는 안된다



- 10.1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 주민자치, 아래로부터의 개혁
재건축사업의 불법·비리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10.18** 법사위는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10.20** LH 공급 후분양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0.57%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하라
- 10.24**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국회토론회]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10.25**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 10.26** 금융위는 은산분리 불변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하라
2013년 이후 웃돈 거래된 투기성 전매만 63만건
- 10.30** 이종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 10.31**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3]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견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2017. 11

- 11.01**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 11.03**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 11.06**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 11.07**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4]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공동서한 전달
- 11.08**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 11.09**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는 엉터리다
- 11.14**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5]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 11.15**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11.1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홈페이지, SNS를 통해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탄핵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가속화

탄핵 이후 7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아파트 한 채(30평 기준) 당 강남권 1억5천만 원, 비강남권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올랐던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이나 상승한 겁니다. 이처럼 급격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후분양제 도입, 분양 원가 공개,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의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 관 주도의 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올해 말까지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소외되고, 동지 내몰림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관 주도의 졸속적인'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민 주도의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 국정감사 93초 핵심 정리

민생, 협치가 사라진 2017년 국정감사. 그럼에도 '정책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경실련이 평가한 2017 정책감각 우수의원, 경실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93초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제민주화 강좌 '재벌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전경련과 재벌의 관계', '역대 대통령의 재벌정책', '삼성에 좋은 것이 한국에도 좋다?'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경제민주화 강좌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 정지훈 | 자신이 기여한만큼 배분받는 사회 곧 경제정의가 실천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이규섭 | 시민의 발전의 위하여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윤정현 | 열심히 응원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
- 조준영 | 경실련 활동방향을 지지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https://www.facebook.com/ccejjusti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Homepage	Twitter	Facebook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 125명, 가입일 : 2017년 9월 21일~11월 20일)

(사)녹색교통운동	김기태	김홍규1	박진제	신성환	유세민	이리라	이종남	임재익	정지연	주권자전	한성철
(사)환경정의	김명철	남시호	박현숙	심상오	유영택	이병준	이종인	임태정	정지훈	국회의	한영철
(사)홍사단	김미란	동영건설(주)	박화영	심윤정(2)	유점자	이석연	이진수	장원택	정진우	지은주	한홍실
(주)지역아동센터	김상용	박광열	배영규	안윤숙	윤경태	이수현	이창록	장인철	정철	진대운	황한성
강성식	김성용	박명희	서창우	여재호	윤동혁	이승복	이재운	정동균	정초연	최미옥	한국관광공사
강신희	김승식	박성수	손국혜	오경옥	윤명숙	이연이	이태호	정란아	정필성	최성범	
강정화	김순득	박순장	손승희	오신석	윤정현	이용욱	이태환	정병오	조수희	최일동	
고상돈	김순복	박애경	손현미	오윤주	이건복	이용립	이해기	정성문	조승래	최재훈	
권중	김영화	박정근	송민호	오화성	이규섭	이재숙	이홍범	정승인	조영문	최환용	
김경순	김용환	박종우	송순	유기환	이낙연	이정수	이희수	정유석	조준영	충청대학교	
김금숙	김호수	박진만	송종환	유선영	이동찬	이정수	일허스님	정정래	조진희	하승수	

중앙경실련	강현신	구은경	권혁근	김기숙	김명환	김상균	김숙희	김용섭	김은영	김재후	김진섭
	강혜정	구자범	권혁민	김기열	김무준	김상덕	김순득	김용숙	김인근	김종걸	김진수
(사)녹색교통운동	경규현	구찬희	금동섭	김기태	김문환	김상범	김순복	김용술	김인봉	김종근	김진아
(사)환경정의	경민수	권경무	김갑수	김기환	김미자	김상영	김승보	김용식	김인숙	김종덕	김진현
(사)홍사단	계충미	권규향	김건일	김길락	김미진	김상우	김승하	김용재	김인영	김종록	김진화
강경수	고경일	권기범	김경낙	김남수	김민식	김생수	김시연	김용철	김인태	김종민	김찬동
강내원	고성순	권동현	김경모	김남훈	김민연	김서현	김시원	김용태	김일기	김종배	김찬석
강대수	고영일	권득용	김경배	김대균	김민주	김석환	김양규	김용하	김일수	김종섭	김찬형
강덕순	고영희	권만열	김경생	김대선	김병각	김선욱	김양수	김용호	김재규	김종혁	김찬호
강두현	고윤	권봉철	김경수	김대성	김병구	김선필	김양진	김용환	김재규	김주규	김창균
강마아	고은주	권상용	김경수	김대중	김병수	김선화	김영대	김우비	김재길	김주목	김창범
강명구	고은진	권상현	김경아	김대진	김병수	김선희	김영미	김우영	김재열	김주영	김창식
강민구	고정희	권순범	김경준	김대현	김병수	김성균	김영섭	김원석	김재일	김주영	김창영
강병철	고지석	권순식	김경철	김대호	김병장	김성래	김영순	김원재	김재하	김주중	김채운
강선미	고지숙	권순용	김경환	김대훈	김병재	김성민	김영실	김원태	김재홍	김주현	김천
강성일	공병욱	권순탁	김관영	김도형	김병주	김성수	김영은	김우룡	김재화	김준	김철
강성중	공양석	권영준	김관용	김동영	김병주	김성수	김영일	김유신	김재환	김준배	김철주
강원호	공정표	권영진	김광배	김동욱	김병철	김성욱	김영재	김유진	김정국	김준식	김철호
강은현	공진하	권오진	김광수	김동울	김병철	김성일	김영주	김유찬	김정돈	김준영	김철홍
강일환	곽기훈	권용습	김광훈	김동진	김병학	김성중	김영준	김유환	김정민	김준호	김철환
강정화	곽세별	권용우	김국주	김동호	김병호	김성철	김영준	김윤기	김정석	김지연	김충환
강주현	곽익영	권용희	김군수	김래관	김보경	김성태	김영철	김유두	김정수	김지영	김치수
강지영	곽지웅	권윤정	김규범	김만기	김보라미	김성필	김영철 (일허스님)	김윤석	김정신	김지현	김태균
강창걸	곽효석	권율학	김규영	김만수	김복환	김성훈	김영철	김윤섭	김정욱	김지혜	김태균
강창구	곽희남	권일민	김규훈	김명균	김봉규	김세정	김예은	김윤식	김정원	김지호	김태수
강창균	광명경실련	권준기	김근수	김명기	김봉진	김세준	김원래	김용	김정현	김진	김태수
강철	구경이	권준석	김근철	김명임	김사길	김세진	김원배	김은경	김정호	김진경	김태완
강철규	구룡마을공동체협동조합	권준우	김근초	김명철	김삼용	김소라	김원욱	김은경	김정호	김진구	김태진
강철승	구성찬	권찬	김금숙	김명철	김삼철	김송식	김용남	김은섭	김정호	김진만	김태현
강태철	구수정	권철민	김금태	김명호	김상겸	김수영	김용석	김은순	김정훈	김진명	김태현



김태형	나상민	문현국	박성규	박재갑	박한호	서경원	손희준	심영숙	양혁승	유일용	이경수	이병재	이신호	이정행	이호경	장원택	정성봉	정혁제	주상희	최세환	하윤호	홍성진	노영록
김태형	나소팔	문현정	박성희	박재성	박행우	서경호	송기민	심인석	엄원종	유재경	이경숙	이병관	이애화	이정현	이호섭	장원택	정성희	정해승	주익철	최수만	하윤진	홍성진	문인철
김태호	나일주	민남미	박성배	박재성	박현진	서병섭	송기성	심정환	여수정	유재욱	이경우	이봉숙	이영란	이정후	이호욱	장유리	정세진	정해승	주인권	최수진	하재연	홍성환	박상안
김태호	나준희	민병욱	박성수	박재완	박형근	서순탁	송다겸	심진섭	여해경	유재혁	이경종	이봉형	이영범	이정희	이화영	장유환	정세훈	정희성	주찬식	최승섭	하재현	홍승영	백승호
김태훈	남기욱	민선욱	박성용	박재익	박해란	서승완	송덕원	심충진	염규석	유종성	이경태	이봉훈	이영욱	이정희	이화주	장은미	정승상	정희창	지동섭	최승우	하연아	홍승우	백종효
김평진	남기원	민수영	박성혁	박재천	박호걸	서영덕	송미영	심해정	염진형	유진상	이경필	이상열	이영음	이종규	이훈	장재영	정승인	조강훈	지동익	최영국	하현진	홍영희	성호준
김필관	남상권	민희숙	박성호	박재희	박호영	서완석	송민영	아름다운의원	예병렬	유평준	이경희	이상룡	이영종	이종길	이희중	장중철	정승준	조강희	지영근	최영식	한건희	홍오성	손창민
김학수	남상길	박건영	박성훈	박정수	박화영	서윤석	송병록	안경숙	오경준	유해신	이곤섭	이상범	이영채	이종민	인지승	장찬홍	정승화	조건영	지영석	최은아	한국인명저원공제조합	홍인표	송운학
김해성	남시호	박경서	박세권	박정교	박화영	서은경	송수영	안규창	오길영	유형임	이광섭	이상벽	이영현	이종수	일허스님	장철기	정연섭	조경민	지용태	최원영	한바름	홍종학	여은미
김현동	남원호	박경수	박세원	박정민	박화자	서정일	송용석	안기영	오상준	유혜영	이광열	이상복	이영호	이종열	임건목	장형환	정연욱	조광현	지정희	최원천	한상윤	홍종화	윤언철
김혁	남재걸	박경준	박세중	박정석	박후근	서정화	송원기	안기정	오세정	유호성	이광택	이상엽	이용근	이종윤	임광재	장해령	정영욱	조광현	진영수	최유영	한상일	홍준표	이덕호
김현덕	남현주	박광열	박수행	박정수	박훈	서종대	송인섭	안병억	오세호	유희동	이광필	이상엽	이용만	이종은	임영호	장홍석	정왕규	조광희	진원석	최은재	한상훈	홍준현	이승훈
김현석	남호원	박광태	박순기	박정식	박희권	서종철	송인윤	안병준	오순택	유희숙	이광현	이상윤	이용배	이종창	임상규	장희곤	정용수	조규홍	진유식	최은식	한석용	홍진구	이혜란
김현성	노규성	박광현	박순장	박정표	박희령	서직원	송인철	안영훈	오승훈	윤건수	이광훈	이상윤	이용선	이종희	임상혁	전기호	정용화	조민상	진중화	최은진	한선아	홍창기	임효창
김현수	노법영	박기서	박승배	박제화	박희선	서한송이	송재경	안완용	오용식	윤경숙	이규용	이상진	이용승	이주하	임서구	전대홍	정운수	조병익	차상열	최은철	한성철	화강윤	정길채
김현정	노상현	박기영	박승상	박중근	박희연	석기영	송태교	안윤식	오장환	윤기복	이규철	이상진	이용운	이주형	임석규	전명석	정원철	조부근	차은상	최인숙	한소람	황경복	정홍준
김현정	노연경	박기철	박승욱	박중석	박희진	석철수	송포명	안인화	오제명	윤득구	이규혜	이상철	이용한	이준모	임성희	전병순	정원희	조성태	차진구	최인호	한승구	황광열	천미림
김현철	노우성	박기훈	박승진	박중선	반영철	선동수	송하동	안재경	오중현	윤영	이균성	이상현	이운향	이준영	임세은	전병식	정윤영	조성희	채대영	최일	한승호	황기명	최재윤
김현희	노재원	박남규	박시근	박중소	방상윤	선우인티내서널	송하복	안정혜	오창훈	윤상균	이근식	이상희	이용립	이지영	임영환	전봉양	정윤채	조성훈	채민성	최장원	한승호	황민호	하능식
김형규	노재훈	박노건	박양제	박중우	방정혜	선종국	송합근	안종범	오창훈	윤숙자	이근조	이석규	이원관	이지훈	임용기	전봉진	정익훈	조성희	채예정	최재용	한영관	황선영	홍창식
김형균	노정호	박달현	박영규	박중원	방중수	설원식	신통민	안종한	오현석	윤여림	이근태	이석기	이원식	이진경	임용찬	전상룡	정인호	조순열	채원호	최정욱	한영철	황선용	황은경
김형조	노진주	박동렬	박영규	박중원	방호창	설창인	신통애	안지현	오현철	윤영곤	이근환	이석범	이원재	이진영	임장원	전상용	정일용	조순홍	채준하	최정표	한영석	황선원	황정호
김형준	노창수	박두영	박영기	박주은	배병달	성광식	신통엽	안진걸	오희성	윤영천	이금희	이석연	이원재	이진원	임재익	전상욱	정일용	조승환	채홍석	최종일	한영환	황선영	
김형진	노해룡	박만철	박영남	박준수	배보현	성금성	신통조	안철원	왕경희	윤은선	이기승	이석제	이원희	이창섭	임재환	전성철	정임식	조연성	천대용	최준용	한중우	황영미	도시개혁센터
김형표	노희철	박명환	박영민	박중철	배영규	성병화	신통진	안현구	왕진산	윤은주	이기우	이석진	이유열	이창엽	임정규	전영진	정재영	조연정	천민승	최준혁	한태경	황유경	
김혜경	라윤흠	박미나	박영민	박지원	배영환	성신	신통철	안호원	원동환	윤인오	이기용	이선신	이윤규	이창효	임종필	전용배	정재은	조영문	천병우	최종길	한홍열	황이남	고일두
김혜숙	류동훈	박미라	박영수	박지은	배유아	성외경	신통기	안효경	원영진	윤일성	이기호	이성구	이윤배	이창희	임청빈	전용일	정재진	조용기	천세안	최종민	함도용	황이숙	공병준
김혜순	류시문	박미선	박영웅	박지혜	배인명	성욱진	신통진	안희숙	원재환	윤재석	이낙연	이성근	이윤상	이철우	임태영	전우영	정정래	조은호	천승걸	최지한	함동균	황인규	곽도
김호	류양석	박민수	박영철	박지호	배정동	성윤숙	신통준	안희정	원종호	윤정섭	이낙원	이성복	이윤선	이춘수	임효정	전장호	정정래	조일흠	최광규	최지현	함두호	황인선	곽창삼
김호	류종렬	박민준	박영환	박지환	배정수	소경섭	신통진	안희철	원해영	윤종길	이남경	이성재	이윤호	이충현	장경완	정경욱	정제용	조재연	최광석	최지훈	함형욱	황인찬	광명경찰서
김호경	류지성	박민진	박영훈	박진순	배중석	소진성	신통철	양광희	유경희	윤종민	이다혜	이성형	이은재	이태영	장동민	정광화	정종원	조재호	최광용	최창배	허남중	황정국	구자훈
김호경	류형욱	박병오	박용석	박진아	배천호	손건일	신영철	양대규	유관영	윤종호	이대열	이소영	이의영	이태용	장두호	정덕인	정주연	조정근	최광현	최창호	허동일	황철진	권영진
김호균	류화근	박병일	박용정	박진호	배홍진	손관구	신영철	양동호	유기천	윤중식	이대영	이승수	이인영	이태진	정문호	정동영	정준수	조종철	최근현	최철호	허병권	황현석	권일
김호성	마경화	박보성	박용제	박진홍	백경아	손기훈	신완기	양두석	유기청	윤지원	이덕영	이수연	이일권	이태호	정미은	정란아	정종식	조주희	최기환	최철호	허석	황호식	금융소비자뉴스
김호시	마미영	박성중	박용준	박진홍	백승진	손무길	신용규	양석영	유기현	윤진철	이덕희	이수영	이재길	이하인	정민수	정만중	정지연	조준범	최낙신	최철화	허수범	황효열	김경희
김호연	맹성렬	박삼희	박우석	박창욱	백요한	손봉호	신용준	양성범	유남식	윤창원	이동석	이수현	이재길	이학수	장병호	정명채	정지원	조준형	최덕천	최혁	허원철	황훈주	김광만
김홍관	문경식	박상기	박원규	박창임	백원중	손성국	신우현	양세영	유동진	윤철한	이동엽	이숙희	이재욱	이학용	장보름	정미숙	정진민	조진만	최덕호	최호영	허익배	황희정	김금옥
김홍규	문광기	박상대	박원석	박철수	백정숙	손성민	신은정	양연식	유록수	윤한필	이동주	이순기	이재완	이한길	장석림	정병순	정창률	조진수	최명희	최용업	허정준	홍사단 투명채널본부	김기성
김홍업	문상준	박상렬	박윤수	박철주	백종무	손성일	신인철	양용배	유명진	윤효상	이동준	이순배	이재운	이한민	장석춘	정병오	정창운	조진오	최범식	최희수	허종호	김덕기	
김호선	문석진	박상성	박은아	박춘건	백진현	손세욱	신정무	양원표	유승	음유정	이동한	이순용	이재은	이한범	장승진	정병철	정대근	조철제	최병오	최희수	허지영	경제정의연구소	김도영
김효원	문세영	박상인	박은현	박춘호	법무법인 문무	손승태	신지영	양유정	유승중	이갑수	이동호	이순한	이재임	이행선	장성영	정상룡	정대명	조현성	최봉문	최희준	형성훈	김동식	
김희연	문소상	박상현	박용순	박치우	변동철	손재운	신철영	양윤숙	유애지	이갑수	이만호	이승근	이정규	이현미	장영식	정상미	정태성	조현익	최석준	추동균	홍광선	강명철	김미경
김희철	문인섭	박상현	박익용	박태선	변상해	손정근	신현호	양인준	유연삼	이강운	이명진	이승대	이정남	이현재	장영오	정석희	정태완	조형준	최성수	크레텍책임(주)	홍대식	곽수근	김병수
나권일	문장협	박상형	박익중	박태순	변수원	손정아	심동준	양창우	유연식	이건호	이명천	이승섭	이정성	이형세	장영환	정선혜	정택수	조희근	최성실	프리임인더스트리(주)	홍도천	김소연	김병재
나기열	문차호	박석순	박인선	박태영	변재근	손종보	심상오	양재열	유인상	이경도	이명훈	이승우	이정수	이형일	장욱	정선화	정하용	주권자전	최성주	하성준	홍미미	김지환	김석기
나병현	문태현	박석현	박인수	박한용	변창우	손호중	심순혁	양태훈	유인환	이경락	이모세	이시연	이정임	이혜숙	장원규	정성남	정해석	국회의	최성현	하승수	홍성균	김혁	김성수

문경지역

2017년 11월 12일



김세용	원두영	하동익	강은석	윤영전	김동명	전방욱	김수현	손정식	정보건	김기석	박태광	정병열	고영원	김재성	박재희	심상록	이영희	지미선	기우태	박광복	송태석	이정학	차현승
김수삼	윤재용	하성규	고석주	윤태룡	김봉래	정광민	김소욱	손진일	정석윤	김기종	박현덕	정복근	고완철	김정	박정선	심해진	이원영	진장호	김경현	박남규	송형일	이종성	채인기
김영	이경희	함승희	고유환	이기자	김석래	정석중	김승한	송수영	정선우	김동명	방진홍	정석호	고재원	김정숙	박정옥	안경애	이윤식	차성미	김광영	박병규	신재안	이종택	천재영
김완배	이동근	허도한	곽일환	이승규	김선정	정세환	김영우	송오성	조승재	김동우	배의용	정연권	고형복	김종임	박종기	안철환	이은경	차정운	김기보	박병기	신주환	이학균	천형욱
김재령	이만희	현철재	권수복	이우영	김재부	정의호	김원용	신미경	조오현	김만규	서선자	정용욱	곽도훈	김종진	박종미	양금석	이은영	최경화	김길현	박병일	심재훈	이형호	천홍석
김재익	이명수	황희연	김근식	이익현	김재준	정의훈	김잠이	신미애	조하영	김용룡	서영기	정훈영	곽병미	김진경	박주한	양기대	이은재	최문교	김남수	박상원	안병주	임기춘	최성종
김정인	이병준		김동규	이장한	김정근	정현석	김정주	신부연	지영배	김범조	서흥기	제수경	곽은	김진숙	박준서	양정현	이재춘	최미곤	김동현	박성수	안병물	임동훈	최영남
김종길	이상협	시민권익센터	김민식	이정호	김진숙	조무현	김종태	신용호	진성우	김병수	손경익	조덕수	구교형	김학준	박진기	양철원	이정희	최미영	김문수	박수인	양동윤	임성태	최용석
김종익	이순배		김병조	이정우	김진욱	진수환	김종현	신찬숙	진희재	김보성	손성목	조영화	구차환	김현정	박진석	오명희	이중석	최상철	김미남	박양우	양영희	임숙경	최윤정
김준현	이양재	김강준	김상수	이중수	김태희	최규천	김철관	안미나	최상주	김부석	손수호	조희창	권도형	김현정	박춘선	오민석	이현우	최철규	김병철	박욱란	양진환	임영범	최정구
김철홍	이유미	김상헌	김성호	이진만	김형경	최복규	김형집	엄수훈	최선중	김성우	손영태	주상중	권순남	김현희	박태준	오성남	이혜수	추규호	김상국	박웅	양혜령	임정훈	최주영
김태호	이은재	김석기	김용현	이현희	김형근	최승길	김종근	여영애	최생중	김연욱	손용락	지병구	권혁이	김혜정	박형근	우동훈	이혜진	티제이티(주)	김성일	박이화	엄창수	임정휘	최진규
김현동	이재문	김영미	김은수	이화용	노영성	최소희	김판열	오성관	최운용	김용철	송성수	최민경	금강장사	김호숙	방소현	우병실	이호석	하숙례	김수영	박정열	여상규	임종철	하주아
김형욱	이정성	김태경	김장철	임명선	박운남	최승룡	김판희	오성주	최운숙	김우경	신수철	최병철	김경태	김희수	배권식	원범재	이호열	한공희	김순재	박준근	오경례	임한필	한국미래경영연구원
김호현	이정식	김태룡	김재기	임홍승	박인재	최은송	김필성	오순혜	최정환	김정제	심정보	최상호	김경표	남기표	배덕현	유수연	이호성	한상미	김양두	박종렬	오미정	임형채	한명석
나경준	이정아	김택성	김재원	장인석	박종시	최충문	김한기	육근호	한기수	김창호	안재철	최성희	김경화	남윤화	배준	유현지	임심례	한윤선	김양지	박준근	오신석	임형철	한성
나인수	이제선	김현아	김정웅	장형원	박지호	한동준	김현호	육방호	한은진	김철년	양철영	최암	김기영	노병일	백정순	유홍우	임진희	한홍기	김영규	박찬숙	오치홍	장외수	한신규
노두승	이주희	나태근	김정진	전귀정	반태연	한성림경영연구소	김호영	육종석	한인숙	김철수	엄자부	최원호	김남권	노신복	변미애	윤승형	장선	허기용	김영길	박창기	유방실	장익	한희주
노웅래	이창수	대외관세사법인	김정현	전미옥	배정순	홍진원	김호일	육혁수	한장용	김충로	오경철	최인찬	김남현	노용래	변한주	윤종미	장영기	허정호	김영환	박창수	유영표	전창주	허기석
녹색소비자연대	이현주	박병식	김재천	전영선	서은주	황은남	나기석	우정숙	허철수	김태걸	오영석	최임석	김남희	노혜숙	서방자	윤진원	전광섭	허종은	김용태	박창현	유현	전홍모	허문수
도선봉	이희승	박인동	김종구	정동욱	송문길	거제경실련	나양주	원순실	허추구	김해숙	오현욱	최정희	김다솜	노희준	서삼례	윤철	전종석	허창순	김인수	박철웅	윤두중	정강택	형민우
류성룡	임경수	서경수	김주호	정명자	송민석	거제경실련	남기원	원종태	허희경	김향희	왕서정	최춘자	김동범	류미숙	서순자	이강순	정도환	홍은선	김일술	박태규	윤봉란	정두숙	홍영신
류중석	임영희	신희권	김진영	정승훈	송재석	거제경실련	남덕희	유차상	현정임	김혁동	우호식	최현익	김미란	류정희	서용원	이건복	정민정	홍진호	김일호	배백호	윤봉영	정병호	황덕자
민범기	임창규	심재원	김창석	정창현	신미영	강경수	남원식	유천업	홍성태	김현근	윤병길	최홍배	김민재	마이인	서우리	이금숙	정병오	황동식	김재석	배용태	윤영수	정상문	황동현
박경남	임형백	유주상	김태환	조광환	신성진	강윤영	남희정	유태영	황분희	김현철	윤상연	최환호	김봉화	문종철	서은경	이기영	정상영	황인란	김재중	백석	윤원진	정용완	황보관석
박상위	장명진	이대순	김학성	주석부	신승춘	강정숙	노재남	윤강원	황정득	김형수	윤정수	한동훈	김상열	민찬식	서이석	이길숙	정선유	황재연	김재찬	백익순	은광석	정원태	황윤용
박성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덕우	김형만	차승주	심규만	강정호	노재천	윤길정	황황욱	김홍국	이관	한성우	김선호	박경욱	서태원	이로사	정애숙		김정훈	백종기	이강찬	정은수	
박연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영근	노귀남	최우진	심윤보	강지은	류금렬	이경희		김홍규	이상수	한순희	김성자	박계량	석학주	이말복	정유석	광주경실련	김주현	버스조합	이기만	정일용	구미경실련
박영웅	전은호	이순기	당명숙	최명규	심한실	강창수	문상필	이광재	경주경실련	김홍기	이성민	한옥련	김소윤	박광수	성윤경	이명숙	정은영		김지인	변동철	이갈남	정종현	
박완기	정동영	이영길	목영주	최호창	양창훈	강학도	박광호	이신학		도형수	이성조	황도연	김수연	박기은	성인숙	이미경	정인애	(유)웅진에너지	김철현	변원섭	이동민	정진철	강명천
박정윤	정성훈	이지연	문행규	추재훈	원경숙	경명자	박대기	이상귀	(주) 신화종합건설	마태근	이수우	황분희	김수진	박문경	손선주	이미희	정중환	(주)대한가스산업	김해룡	변재영	이명규	정찬용	강승수
박찬우	정애리	이진	박경서	한광수	윤도현	고석진	박영욱	이상미	강명근	문성현	이수향	황진환	김승복	박미경	손솔이	이민지	정지선	(주)영무토건	김현	서민호	이봉주	정혜경	강신웅
박희정	정인환	이창수	박금해	한정훈	윤성원	고영주	박성호	이상천	강신희	박귀룡	이영화	휴먼뱅크(주)	김애란	박미영	송경섭	이병렬	정진우	(주)영암마트	김현모	서상기	이상각	정혜련	고영호
배용규	조돈철	이태호	박용현	한준구	윤순모	권인호	박수정	이성호	고유승	박봉찬	이운주		김연욱	박미정	송금욱	이병순	정하준	(주)해양도시가스	김현석	서상기	이상근	정환채	구자근
법무법인 인의	조우현	장영	박은주	홍명근	이광중	권영화	박소욱	이양식	고주현	박상민	이유형	광명경실련	김영근	박미화	신기랍	이병철	정학균	강신주	김현중	서수연	이상길	조광득	권구일
변창흠	조재형	장윤정	박준우	황대중	이귀녀	기산종합건설(주)	박애숙	이외자	곽정섭	박성준	이인형	(주)테리서시이클링	김영미	박민관	신동렬	이복자	정혜경	강은섭	김현철	서재형	이승노	조교영	권보
서민호	채원호	장진영	박준형	이숙희	김경섭	박인근	이은경	권기흠	박성진	이재인		강귀덕	김용관	박복임	신민선	이부순	정희균	강정미	나미영	서해자	이연	조선익	권순서
서순탁	천안경실련	전종찬	배인교	강릉경실련	이요한	김경수	박추홍	이장명	권순호	박세영	이정운		김용관	박복임	신복인	이석석	조범상	강현수	나병철	선종아	이영기	조성식	권윤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강림	정경수	배종근	이윤일	김대봉	박태원	이장표	권영국	박세정	이종대		강성철	김용길	박상윤	신선영	이성숙	조상희	고근	나성영	설상욱	이은방	조인형	길윤욱
신행숙	최두호	조영관	서관승	고석태	이정임	김민수	반영진	이정택	길종구	박옥선	이지애	강신재	김원선	박성배	신성은	이성진	조아라	고려가스(주)	나홍덕	성인규	이을용	조재근	길효양
심재민	최영철	추승우	송정호	고재정	이제영	김삼기	백세정	이중우	김가형	박용대	이창민(철우스님)	강옥영	김윤권	박성영	신숙진	이승재	조은하	고려가스(주) 광주	노회정	소병환	이인수	조현지	김경훈
심준신	최병선	하성용	신경화	구광범	이주석	김상일	백순환	이철용	김경대	박익일	임배근	강옥희	김윤욱	박승원	신영옥	이승봉	조태섭	고영삼	대광새마을금고	손성만	이재석	주경남	김귀화
양우현	최윤정		신영욱	권상동	이지은	김석준	백승일	이형로	김경아	박임관	임보향	강윤숙	김윤재	박영훈	신윤철	이양희	조해성	고형석	류한호	손철식	이재윤	주호연	김낙관
양혁승	최정우	통일협회	신종성	권오석	이진아	김선심	서주종	장석주	김경호	박진만	장은주	강주례	김윤호	박옥남	신은숙	이연주	조화영	공수현	명노민	송광운	이정근	지명순	김도형
이정현(주)한국미래경영연구원	최환용		안춘훈	김남두	장선애	김성진	손성미	전갑생	김광진	박진용	전용범	강찬호	김은임	박은경	신혜정	이연숙	조흥식	구희선	모현숙	송원식	이정량	지병근	김동욱
오세형	포스코	강만성	위정희	김남영	전규화	김세린	손은희	전기풍	김구영	박치만	전진대	강희규	김은진	박재철	신혜진	이영신	주태진	권충화	문정찬	송윤주	이정주	지현도	김문환



김보준	이관순	(유)파정제문화원	임규원	신영순	대구경실련	김영권	박한승	이근원	정영모	강명자	김해천	안재준	전국진	목포경실련	문준석	안영하	정해수	강병호	김대중	김영신	김진현(2)	박국순	배성훈
김봉교	이덕수	강학근	전균섭	신상천		김영모	박해식	이노수	정영은	강병규	김홍숙	안중훈	전영춘		민경준	양명희	정호원	강성태	김도	김영옥	김창희	박도영	배수미
김연고	이명숙	고계근	정영조	심상용	(주)남캐리(주)이선즈	김영두	배병두	이미정	정은숙	김재규	남영희(주)한세(주)	오세윤	전학구	(유)백의사생중진사업단	민찬홍	양승희	조기석	강시명	김동영	김영옥(2)	김철도	박동범	배용준
김요나단	이명희	고덕영	정태영	심영섭	감신	김용찬	배석운	이병화	정재근	고나현	대전도시공사	오원관	정대용	강병길	박강일	양영주	조성익	강예운	김동호	김영종	김춘덕	박명식	배혜래
김윤희	이미경	김영혜	조용석	안철환	강연환	김용철	배은정	이봉우	정재영	구범립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오중섭	정상배	강병조	박광배	양판승	조순형	강유동	김명석	김영호	김태경	박미순	배화숙
김은희	이미숙	박은아	조재용	안호열	경희창	김윤호	변부형	이부용	정창길	권은남	도남선	오학석	정상훈	강성태	박근영	여성준	조영교	강인중	김문규	김용섭	김태구	박미영	백대영
김인순	이상도	심규만	차숙희	양영재	계양엔진종합상사	김재범	서정걸	이상록	정태완	권철명	명을식	우금옥	정상희	강영태	박문옥	오승주	조용호	강정규	김미경	김원원	김태우(2)	박민우	백영호
김재욱	이상철	정동원	최경웅	어중석	공영선	김정렬	서종철	이상천	조광현	김금숙	문경재	원용철	정승래	강주천	박석일	오형열	조인수	강주하	김미향	김용원(2)	김태훈	박병만	변성준
김재훈	이영애	최웅	최종식	엄선덕	공재식	김중용	성영락	이상필	조락현	김기남	문정수	유기안	정예성	권인철	박성일	원요준	조준범	강종목	김백철	김용필	김태희	박복용	부두봉
김종배	이원재	페이피코리아(주)	하수진	오미애	곽덕환	김종태	성윤상	이상화	조방희	김기범	박경오	유병연	정우택	김경옥	박성진	유경생	차경아	강태문	김병근	김원태	김학진	박봉수	부산혁신도시사업청
김종율	이원희	홍관표	한성수	오홍미	곽동주	김종태	손광락	이선혜	조상제	김길순	박근영	유병한	정은선	김경철	박세훈	유광호	천병식	강필원	김병기	김유경	김해봉	박상수	부산도시가스
김준희	이정건	홍기원	호희국	웅심이칼국수	권기억	김지현	손상호	이성철	조용원	김동선	박기남	유인규	정인규	김관옥	박소영	윤치술	천현중	강현주	김병용	김유석	김해영	박석원	부산시설공단
김진익	이제수			원용벽	권기혁	김진호	손상흙	이연재	조인지	김동철	박기용	유인수	정현재	김광배	박송춘	이덕일	최명숙	강형숙	김병하	김윤영	김현욱	박선아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철광	이종률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유영록	권대우	김창수	손수익	이용세	조정학	김명경	박상훈	유현숙	정희대	김광창	박순옥	이명희	최병기	경규성	김보엘	김은숙	김현재	박성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김현미	이창형			유호석	권동일	김천일	손승안	이윤호	조찬호	김명제	박성원	윤주병	조성천	김대근	박승채	이문희	최연식	경동건설(주)	김복준	김은영	김형권	박성철	부산지방법무사회
김휘연	이태동	곽윤열	(주)신원렌터카	윤영자	권병훈	김태선	송상수	이장수	주태환	김명주	박성진	이건희	조용석	김두영	박승옥	이범수	최완수	고명석	김봉국	김인한	김형균	박성호(2)	부산지방법무사회
김희진	임은기	국경아	김영자	윤미숙	권오숙	김태수	송영식	이재민	진연수	김병국	박영순	이계자	조용태	김명숙	박영용	이병채	최일	고순생	김봉규	김인환	김해경	박승제	서경국
김희덕	임주석	권영훈	김남규	이경화	권오준	김태우	신영섭	이정웅	차진근	김상환	박종대	이광자	조유제	김명진	박용욱	이상권	최재경	고유석	김부근	김장섭	김해경(2)	박시우	서경숙
김희철	장기태	김대욱	김두관	이경희	권윤집	김태환	신흥권	이종경	최동학	김성민	박준혁	이광진	조철휘	김명철	박인용	이성로	최종명	고인홍	김보이	김재명	김호범	박연수	서만석
나호훈	장문석	김동별	김문경	이금순	권대윤	김해철	심병철	이지영	최우곡	김성용	박희조	이문지	조항범	김문재	박정석	이인수	최호길	고재일	김삼문	김재일(2)	김홍재	박영봉	서미화
노상진	장세광	김동조	김미자	이기형	권택중	김현수	심준섭	이진태	최원아	김양택	방명덕	이범규	조혜형	김민희	박정희	이재광	최환석	고정연	김삼수	김재찬	김홍태	박영현	서범수
라병희	장종길	김석현	김영로	이두열	권휘동	김현조	안영석	이진현	최은영	김영기	방정희	이병승	주식회사 세이디에스	김보현	박종두	이재성	하상복	공병승	김상길	김재훈(2)	김홍취	박용주	서봉원
박성도	장준우	김연승	김옥순	이부형	길성민	김효진	안정향	이진희	최종만	김영주	배동국	이성일	주옥규	김상원	박종범	이정진	한상호	곽상진	김상배	김정량	김훈	박용한	서수금
박성표	장흔성	김영수	김용훈	이재홍	김강식	나영희	안화석	이창건	최준호	김영희	백정웅	이승용	주정봉	김선실	박종철	이종화	한승주	곽원병	김상욱	김정민	김훈태	박재분	서양수
박순이	전윤한	김영희	김종열	이정규	김경민	남동강	양우준	이창용	최지원	김욱	서동국	이영수	정리비인양호(주)한수	김성두	박주이	이찬식	한태연	구명중	김상태	김정수(2)	남경태	박재욱	서은정
박영주	전호갑	김중수	김준현	이정수	김대식	남동현	양원규	이태용	최한석	김원희	서영석	이용훈	지정배	김성철	박창수	이천호	홍건숙	구주영	김상호	김정숙	남기찬	박재율	서종석
박응도	정제봉	김창호	김진희	이중기	김대진	남운환	엄봉훈	이해숙	하경태	김은주	서영완	이윤숙	진동규	김수경	박창윤	이철수	홍국선	구효송	김석준	김정순(2)	남영현	박재현(2)	서창근
박재욱	정진수	박정민	김창집	이중준	김도영	남인철	엄인용	이형태	하순화	김응배	서재열	이윤행	진동섭	김승호	박철수	이한경	홍근표	국회원	김석호	김정택	노경조	박재홍	서현수
박정구	정택균	박충수	김철경	이중재	김도한	노영희	에스제이건설(주)	이호석	한상인	김인철	서정원	이인세	차정민	김신규	박한호	이현중	홍석준	권기철	김선년	김정현	노상훈	박정구	서현식
박주영	정택동	박평식	김형창	정일환	김도형	노윤경	여우현	이희영	한중해	김재경	서준수	이재민	최경호	김영태	박해령	이형오	홍순길	권명섭	김선미	김종근	노영욱	박정숙	서효영
박형진	조경래	박희찬	남기후	조승현	김도형	류규하	여은상	임종오	허남렬	김재석	서흥원	이재영	최경훈	김예영	박혁진	이형완	홍진표	권범현	김성권	김종구	노일용	박종덕	서효정
백승국	조동현	석경수	남익선	조용문	김동석	맹일영	여택동	장석희	허인설	김중하	성기석	이정구	최기우	김정민	박현희	이홍성	권성빈	김성근	김종기	김종기	도한영	박종수(2)	석승희
변창우	조현수	송정복	도기준	조용세(명신현의원)	김동철	문인수	우동락	장우석	홍희창	김주홍	손대근	이정구	최미경	김정아	박홍식	임종석	부산경실련	권오성	김성길	김종민	롯데건설(주)	박주원	석진열
소평진	주광정밀(주)	심상선	도현순	조중석	김영수	문호상	우형택	장은숙	황광석	김진숙	송영환	이중범	최봉문	김중숙	배상기	장미	권은경	김성수	김종현(2)	류강렬	박진성	석태호	
송장호	지대근	심재숙	류문식	권희애(한진중공업)	김영혜	박경욱	유성근	장철규	황귀선	김창근	송유숙	이철은	최이성	김종익	백재봉	장종국	(주)경성에너지	권재현	김성열	김주영	류위훈	박찬일	선석렬
송철원	최근애	안중호	류승범	채신덕	김무중	박동환	유성호	장해열	황병일	김창숙	송인걸	이학재	최정환	김중호	서이채	전중국	(주)동원개발	권태섭	김성춘	김주현	류은영	박창식	설광석
신미정	최낙렬	양태백	문태식	최영미	김민한	박병준	유영익	장호경	황정현	김춘길	신상헌	이현대	최정우	김창세	손미란	전철균	(주)롯데자이언츠	김기아	김성태(2)	김주호	류종성	박창호	설호석
신주식	최선호	유애순	문현미	최재용	김미화	박병호	유영환	장호열	황종숙	김충신	신선호	이현숙	한경이	김태중	송미승	전철영	(주)부산은행	김갑환	김성호(2)	김주희	류진호	박철중	성덕주
심재필	최연호	이경은	민경환	한성식	김민석	박승철	유왕근	전상훈	김태연	신창호	이형복	한도(주)대우건설(주)대우건설	김태현	송영중	정남준	강경태	김경일	김성훈	김준기	노상성(주)대우건설	박철한	성병창	
심정규	표상욱	이상운	박광근	한재혁	김병규	박영식	윤태우	전성욱	대전경실련	김태현	신현진	이화영	한기평	김판조	송진호	정대철	강규성	김경조	김성훈(2)	김준환	모상선	박태주	성영미
양진오	하영백	이상춘	박민호	한해경	김상돈	박은영	윤현식	전영선	김태형	신희권	이윤택	임윤택	한성림	김하성	송홍범	정영오	강대영	김경택	김성훈(3)	김지만	문상철	박한규	손병열
엄상섭	허진	이석진	박병돈	허우섭	김상진	박종률	윤홍식	전재호	(주)동그랑	김태호	신희영	장복수	한성숙	김홍식	송희진	정삼수	강미라	김광식	김수미	김진	문상철(2)	박현욱	손봉주
오영재	홍인수	이선덕	박상석	홍석만	김선완	박종익	이강태	정경선	(주)마루농산	김태훈	심영주	장인성	한화교	김희환	신관용	정승임	강민석	김길수	김수빈	김진석	문문순	박희영	손상용
윤달근	이유설	박영훈	황인문	김선희	박종철	이경민	이경탁	정문정	(주)맥키스컴퍼니	김현조	안경래	장인철	황의달	노경윤	신재범	정영창	강민수(2)	김남식	김수자	김진영	문재천	박희정	손순용
윤상훈	군산경실련	이중암	배건웅	황인순	김승환	박준상	이경탁	정성윤	(주)한미음푸드시스템	김현하	안병진	장형근	황재익	명근홍	신주환	정진대	강민정	김남일	김쌍우	김진찬	민지훈	방성애	손영일
윤종석	이희재	백종일		김신호	박치상	이경화	정연욱	강다은	김형태	안영찬	장화식	이정구	최이성	김정아	박홍식	임종석	부산경실련	권오성	김성길	김종민	롯데건설(주)	박주원	석진열



손정현	안영석	윤성미	이성형	이현주(3)	정명식	조요환	최철원	고현주	김원일	박성진	양해준
손창욱	안문상	윤상현	이성환	이훈전	정명희(2)	조은정	최혜경	공정관	김유경	박성한	여주하
손창우	안병록	윤석준	이성훈	이희길	정미경	조은플러스	최희원	곽병용	김유리	박세찬	엄경선
손치훈	안연균	윤성미	이성희(2)	이희전	정미한	조종석	탁영민	곽종환	김은희	박수경	엄천수
송미경	안원하	윤수성	이승우	임무진	정민재	조지혜	하나연	권종식	김인섭	박승민	엄태영
송상연	안원호	윤영태	이승호	임우택	정성문	조홍규	하상철(2)	길목	김일환	박영덕	오광택
송속희	안재민	윤재성	이시화	임종수	정순영	조효제	하성훈	김 철	김재학	박영희	오모현
송순임	안종일	윤재철	이영갑	임호	정순일	주수현	하순금	김경석	김정수	박웅기	오승택
송원섭	양대건	윤정현	이영신	임훈	정순화	주식회사사무학	하주수	김경순	김정식	박정민	오윤택
송은주	양동열	윤지석	이영호	장귀봉	정승화	주식회사신태양건설	한기성	김경아	김정아	박종갑	오홍필
송재광	양시경	윤지영	이욱형	장다갑	정신모	주안나	한병무	김계남	김정인	박종학	원은주
송재은	양원석	윤현철	이용주	정문숙	정애니	주영숙	한병철	김나영	김정훈	박종현	유성봉
송정숙	양은진	이갑준	이원경	장문정	정영점	주재민	한성국	김남춘	김중담	박종훈	유영민
송중두	양재화	이강진	이위덕	장봉주	정웅성	지경아	한성안	김동수	김중윤	박준범	유영창
송중환	양종철	이경학	이은진	장선미	정용수	지은아	한재철	김동순	김주철	박희식	유종완
신경근	양종필	이광열(2)	이은희(2)	장성호	정우진	진동식	한종석	김말순	김준섭	반영덕	유주희
신군재	엄세원	이규순	이을찬	장영철	정은선	진수진	해운대블루	김명섭	김진태	방대식	유혜정
신대량	여재호	이규섭	이일용	장윤석	정장한	진효상	라인(주)	김영욱	김진태	변성수	윤광훈
신동욱	오병루	이규현	이재정	장재구	정재동	차동박	허인도	김문석	김진희	변인미	윤규식
신동윤	오상준	이남기	이재호	장준흠	정재호	차동욱	허진욱	김미정	김천수	서영기	윤기순
신만석	오상환	이남중	이정남	장지태	정종학	차진구	허해녕	김병욱	김철수	서은진	윤신남
신병훈	오세룡	이덕식	이정민	장해욱	정종화	차창호	현우건설팀	김부석	김철환	석명환	윤재훈
신상구	오연석	이동률	이정식	장희정	정지원	천상수	현지훈	김상기	김춘식	선영복	윤재희
신성환	오지영	이동운	이정향	전보익	정진걸	천용욱	홍경자	김선일	김충남	소문섭	윤정은
신승균	오철조	이동일	이정호(2)	전선임	정창화	천정호	홍봉선	김선철	김태균	손병섭	윤준
신영호	오대석	이동진	이정환	전세표	정준희	천현수	홍일표	김성권	김태영	손재복	이건욱
신용삼	옥성애	이동환	이정훈(2)	전용배	정지금	최규덕(2)	황국자	김성근	김형걸	송경희	이검호
신유천	옥진우	이동훈	이제숙	전우철	정래영	최남연	황범하	김성미	김형기	송제철	이경삼
신이건	왕인	이만수	이조경	전일수	정태호	최달웅	황보승희	김성욱	김호준	송종철	이경애
신인철	우명자	이명식	이중석	전정호	정하윤	최민식	황영식	김성울	김희정	신대섭	이관
신정희	우성철	이미경	이중원	전진영	정한성	최병근	황영재	김수근	남상진	신선익	이기원
신철성	우정용	이민호	이중철	전찬일	정해균	최병찬	황인	김수자	노금희	신영근	이대길
신총기	원희연	이병기	이중학	전현수	정해명	최보규	황인구	김수정	등병희	신재민	이대복
신해송	유명길	이병준	이주영	전호열	제미경	최신아	황호선	김순복	라용일	신종출	이돈섭
신향남	유수윤	이병진	이주현	정경진	조명래	최성관		김순봉	문정열	신창승	이동균
신현무	유완식	이병호	이주환	정광현	조명제	최수영	속초경실련	김승길	문재용	신현식	이문규
신혜숙	유재기	이봉진	이준승	정권영	조민주	최승환		김승숙	민현정	신홍사	이문성
심미예	유재엽	이상구	이중하	정규용	조삼현	최원석	(주)강원으로	김승철	박경미	심삼옥	이문영
심상조	유정기	이상미	이진수	정근	조상희	최원용	강동우	김시형	박경심	심연흠	이미경
심성구	유정동	이상백	이진수(2)	정기섭	조양래	최은주	강미심	김연미	박경자	심화섭	이병선
심윤정	유제현	이상진(2)	이청재(경성유업)	정달식	조영규	최재명	강석태	김영석	박근철	안경수	이봉진
심윤정(2)	윤강훈	이상택	이춘구	정도영	조용규	최재호	강신길	김영식	박덕희	안재준	이상정
심인섭	윤경만	이상현(2)	이학봉	정동만	조용언	최정목	고선창	김영아	박민용	안종석	이상호
심형철	윤경태	이선희(2)	이현민	정동열	조용한	최준식	고영진	김영호	박영중	안종원	이수영
심혜인	윤기혁	이성권	이현우	정말순	조유정	최진욱	고인선	김용일	박병훈	양영희	이승재
아영아	윤나영	이성열	이현제	정명길	조요득	최찬규	고종문	김원기	박상준	양진욱	이언우

이열호	정은희	홍명관	김용석	박정화	유상철	이현순	한상용	강경호	김춘호	심규호	장동근
이영선	정진용	홍인숙	김용일	박제현	유상태	이호섭	한옥자	강기성	김태훈	양근서	장동일
이영수	정홍기	홍전희	김용철	박준배	유재성	이희수	한창균	강수문	김혜만	양태호	장미진
이영순	조광덕	홍천동	김용	박진순	유재상	이희숙	한창석	강수진	김현삼	양현석	정명숙
이우영	조명수	홍해용	김은하	박태경	윤귀현	임용순	한풍교	경삼수	김현호	오관영	정세진
이운연	조성열	황보해용	김인석	박현웅	윤두천	임태정	허성균	경창수	김형욱	오남숙	정승현
이은희	조현국	황시영	김재기	박형순	윤미경	임혜경	허윤범	고관	김혜숙	오은석	정안철
이인숙	주대하	황영필	김재성	박화진	윤희경	장명옥	허재구	고미나	김혜영	오정순	정연주
이재선	주영래	황은숙	김정욱	박흥덕	이경섭	장성근	허현태	고영인	김호득	오진호	정용기
이재정	주용현		김중석	배창수	이경환	장점숙	홍영호	곽도훈	김희공	오현주	정우혁
이재홍	진장수	수원경실련	김중선	백해련	이국희	장점오	황경희	곽태영	나정숙	오현주	정은수
이종섭	진행배		김중오	변수정	이금희	장현주	황대호	권대근	남기순	왕은희	정은식
이종식	천성미	(주)청영건설-최영옥김중합건축사무소	변영선	이길영	정계화	황민석	김경미	남정애	원미정	정은혜	
이종식	천성필	김미경	김준혁	서경희	이명옥	정수진	황성우	김경숙	도원중	윤명숙	정미진
이주연	최관식	강민철	김지란	서상범	이민구	정순혜	황용원	김경애	류영숙	윤상민	정정순
이중길	최근석	강우정	김진한	서수정	이범주	정양훈	황지숙	김기범	맹정임	윤성웅	정주호
이진여	최길순	강인선	김충관	서정근	이상명	정연규	김기희	맹강섭	이갑순	정진욱	
이진형	최돈환	강희정	김태선	서정욱	이상해	정원재	순천경실련	김대일	문연숙	이강숙	정철욱
이철	최동권	강희진	김태학	서환	이상호	정자홍	김동인	박경용	이경란	재종길	
이태열	최동훈	고기준	김해영	서홍석	이성희	정종훈	강철호	김명연	박경중	이경석	조경래
이필선	최서호	고병덕	김현구	성기원	이수행	정태정	김미정	김민	박경태	이경진	조안호
이필순	최성주	구본숙	김현태	성현구	이승호	조경두	김선명	김병재	박금자	이근미	조재기
이현녀	최승명	권후남	김혜련	손현미	이영인	조규만	김성준	김복희	박기욱	이미숙	주만수
이현미	최애리	김경수	김혜숙	송기진	이영주	조병모	김종선	김상혁	박동신	이민근	최경숙
이호석	최영미	김경호	김호근	송원찬	이용호	조석환	김준호	김성욱	박상호	이벽희	최복수
임정길	최용석	김도형	김훈	신경환	이운창	조승백	김지훈	김성봉	박성진	이병욱	최영화
임중희	최유정	김동선	나민수	신동섭	이원욱	조영춘	나창수	김세원	박승철	이상현	최운
장경민	최종현	김동원	나태성	신지훈	이원재	조형훈	박재현	김승철	박은호	이선희	최윤정
장명석	최지문	김말순	남택진	신한미	이의봉	주광애	비손이앤씨	김영림	박정희	이숙경	최임이
장봉주	최진철	김미선	노종용	심재광	이재득	주영훈	서용현	김영숙	박종호	이숙란	최재림
장성원	최춘파	김미옥	명홍진	심현자	이정원	진송주	오정록	김영희	박준연	이양주	최현수
장은선	최택수	김미정	모성은	안혜영	이정하	최문태	위미영	김영희	박태순	이옥례	하은희
장재수	최형덕	김민수	문순심	양우혁	이종령	최석환	이상휘	김옥경	박해부	이옥희	하혜경
장재환	최혜경	김민수	민경록	양재철	이종만	최영숙	이옥기	김옥수	박희경	이용진	한미현
장주열	최효섭	김백규	박관우	양진하	이종주	최인수	이종철	김윤재	백영국	이용천	한수연
전용성	추종권	김봉균	박동선	염규용	이주연	최인자	이천오	김요희	서정열	이정미	현유경
전이령	탁동철	김석규	박선미	예인기	이주현	최재훈	장동식	김은주	서혜경	이정민	형천호
정문교	통일자동차공업사 고생관	김석진	박승원	오동석	이진성	최진학	정순관	김정란	석진성	이정아	홍경남
정봉재	한살림	김성연	박원기	오동욱	이찬용	최진환	정은희	김제동	설준수	이주옥	홍장표
정상철	한상민	김시영	박용환	오세환	이창모	최찬호	주지은	김종길	성준모	이창수	황영화
정순희	한성희	김연기	박원호	오완석	이창진	하만호	한지은	김지영	신남균	이천환	
정양언	한정숙	김영기	박운환	오일용	이판수	하순진	홍상우	김지훈	신동국	이해나(하용녀)	양평경실련
정연미	함국기	김영래	박은호	오지현	이필근	하은미	황인용신경과의원	김창모	신병철	이희대	김명희
정용주	함준식	김영수	박익중	오해경	이필근	하창호	안산경실련	김철환	신창환	임명자	안영일
정원모	허우린	김영태	박재관	우양미	이해균	한경수	안산경실련	김철환	신창환	임명자	안영일
정윤희	홍련암	김원동	박재순	유병욱	이현미	한곡지		김초환	신창하	임현규	강대우



김병국	박수경	이길한	채종묵	서영남	구준모	김성완	김호열	박종오	신원재	유재춘	이성훈		이현호	조계만	최충	(사)공정무역인턴광장	김경호	김용모	명창준	변태수	우련통운(주)	이운성	임헌준	조자영
강신우	박수형	이대형	천귀선	서호영	권광일	김성재	김홍태	박종욱	신은순	유학선	이순창		이현희	조길문	최종악	(주)경인방송	김계원	김용민	목동훈	사단법인 인문학예술회	유동현	이은정	임희숙	조현경
강원정	박소영	이동연	최갑주	송승하	권순원	김세동	남기태	박준모	신종욱	유혜란	이승남		이호영	조남술	최준봉	(주)동우로지스	김관호	김우경	무의도해운(주)사단법인 한중기대인회	유재진	이은복	임희진	조현준	
고혜란	박애경	이동준	최두영	심경택	권영미	김수동	남용대	박진형	신종욱	윤광석	이승현		이호일	조병돈	최현희	(주)디씨아이	김광업	김원화	문상범	사단법인우지개	유제훈	이의재	장영현	지영일
구민진	박옥경	이명규	최석운	심재수	권영배	김숙현	노필원	박진형	신철승	윤남선	이상순		이훈	조생남	하맹수	(주)디에스메일	김광호	김윤식	민근홍	사단법인공공민간협력	유지상	이일희	장일진	지용택
권수연	박은정	이미순	최소영	안성용	권영진	김순업	두레주류창신사거리점	박창근	신해진	윤남용	이영우		이희상	조용월	하태길	(주)선광	김근영	김윤태	민동식	서경옥	유진성	이재학	장일훈	진인주
권오병	박장수	이병은	최영식	오경섭	권영훈	김순업	류성민	박창근	신현숙	윤미애	이영현		임영원	조장래	하현홍	(주)영진공사	김기한	김은경	박경호	서부길	유필우	이재훈	장정민	진혁화
김경덕	박태원	이상건	최영준	오승석	권오섭	김연희	류시근	박창렬	심관보	윤수영	이영훈		임선미	조정숙	한덕이	(주)인천일보	김길자	김은영	박동석	서용성	유홍성	이정림	민간문화재단	차경열
김경수	박현일	이수진	최창규	윤주현	권오주	김영근	마상호	박태문	심규대	윤수영	이옥희		임성규	조종성	한덕이	(주)장금상선	김남돈	김은환	박명희	서원경	윤관옥	이정욱	전동춘	차광윤
김경희	방민경	이승용	추은경	이문식	권진형	김영자	마석홍	박태문	심형모	윤준호	이용근		임성식	조철현	한문집	(주)진영이앤지-최은옥	김대중	김용철	박상문	서주선	윤대기	이정윤	전성식	차동열
김광윤	배만병	이연이	하보균	이식	권혁봉	김영자	마석홍	박형국	안병운	윤태범	이용만		임승한	조춘순	한만준	(주)한성라인	김도현	김의식	박상찬	서태원	윤동구	이정희	전영우	차득기
김대우	배연정	이연호	허윤희	이유형	권혁왕	김영준	마세진	박홍재	안봉섭	윤태범	이용연		임은혁	조택선	한순택	SK인천석유화학(주)	김동완	김인수	박상희	서해안	윤영철	이종일	전영진	최경훈
김덕현	서동일	이용성	홍성원	이중원	기보중	김영춘	마애진	배경희	안신실	윤향숙	이우정		임철만	조택선	한영순	강경하	김동우	김재경	박석민	성기건	윤미선	이주영	전용성	최광용
김동운	서시은	이의협	홍성현	이철	김 준	김예륜	목현실	배정수	안재영	윤혜숙	이운용		임한권	조한영	한영옥	강덕우	김동호	김재식	박성인	성덕규	윤철성	이주용	전우진	최광은
김동현	서진숙	이지형	홍승희	이평호	김강산	김옥자	문미자	배중열	안정민	윤희태	이윤숙		임혁빈	주상운	한은상	강명선	김두영	김재영	박수영	성용원	윤지의	이중환	전준권	최금행
김명주	성종규	이정림	황규영	임호상	김경건	김왕근	문승옥	변영구	안창호	은종원	이은미		장경자	주상운	한은상	강명수	김락기	김종길	박소옥	손병옥	윤호	이지영	정기호	최두영
김명해	송명원	이지연	황순찬	장중배	김경률	김용섭	문연래	변정해	안철한	이강문	이은자		장교환	지소연	한재수	강상근	김명석	김종욱	박시우	손창원	윤희정	이진준	정낙식	최병길
김민섭	송영배	이지은	황영미	정대훈	김경림	김용태	민승례	변정해	양정분	이강수	이의성		장영란	지정철	한정민	강석	김명제	김종호	박신숙	송경희	윤희택	이찬우	정두용	최상희
김민정	송오찬	이철규	황현주	정승환	김경자	김우재	박경룡	부태길	양희진	이경수	이익재		장왕영	지효숙	한정현	강석철	김미경	김종화	박옥희	삼국문화재단	이갑영	이창숙	정미경	최성원
김선자	송진원	임승기		정정식	김경중	김운경	박경미	빈종진	어덕경	이경수	이재범		장원섭	진선중	한준학	강신원	김미경	김준우	박용해	송문성	이강훈	이창운	정석조	최성진
김성민	신민희	장승희	여성경실련	정주현	김경화	김용제	박기환	빈종진	엄기홍	이경호	이재용		장원주	차동환	한준호	강욱엽	김미영	김진영	박윤수	송원덕	이경우	이창훈	정석환	최순자
김수은	신순봉	장영달		정차섭	김광수	김은이	박영순	사단법인에이트창업	엄태희	이경화	이재학		장재훈	차준은	한준희	강일형	김병우	김진희	박정남	송인선	이귀복	이철준	정선오	최인용
김순옥	신승한	장은혜	강규호	정치훈	김광수	김은하	박명철	서성원	엄희용	이광석	이정길		전상진	채봉수	한희자	강정호	김병철	김창선	박종석	송태영	이기태	이종우	정승연	최일동
김양수	신정원	전미옥	강성훈	제성명	김광식	김은희	박병건	서원교	여재혁	이광세	이정숙		전성호	채홍철	함연자	강태경	김봉수	김칭우	박종호	시사인천	이길성	이한용	정승용	최재식
김연호	신희정	전승희	강용원	제윤경	김광인	김의섭	박병대	서은숙	여한수	이광윤	이정형		전영석	천기영	함연자	고덕봉	김상길	김태호	박준용	신병철	이다빈	이해우	정영중	최재혁
김영선	안경모	전재은	고용국	조현혁	김금녀	김인기	박상옥	서재호	오근철	이광재	이종승		전영애	천병기	허림	고동희	김상섭	김태훈	박진석	신영은	이덕환	이현경	정원경	최정자
김영학	안은경	전재현	공성식	주춘	김기석	김재순	박상용	서정순	오명환	이광호	이종원		정병관	천재영	허범석	고려고속해리(주)	김상열	김하운	박찬화	신은철	이도형	이현석	정은식	최정철
김영환	안정희	전종덕	권동채	천상국	김기열	김재임	박상임	서희숙	오병재	이기훈	이종한		정선옥	최근우	허수행	고재성	김선홍	김현식	박창화	신종한	이도희	이현준	정재영	최준혁
김용란	안태희	정경숙	권인홍	한병세	김기은	김재홍	박상천	성주영	오석호	이길수	이주윤		정성기	최대규	허임범	고정규	김설	김희연	박철현	신현수	이동기	이형규	정재윤	최찬용
김은미	여병찬	정남선	권진구	한해광	김기태	김정범	박상철	성희연	오성순	이길윤	이준호		정순현	최동규	허임범	고태성	김성근	나영우	박태선	심연삼	이루다	이형수	정지은	최현
김주남	여현정	정연준	김동식	홍춘식	김길홍	김정수	박선규	송경은	오성용	이길윤	이중재		정승수	최명섭	허준환	공규현	김성수	나종필	박판순	심정순	이리우	이후삼	정진수	최혜자
김주원	염종	정영수	김동채		김대축	김정천	박선영	송미정	오세린	이대현	이진관		정용희	최병주	현주섭	구자길	김성태	나종훈	박한정	사단법인에이트창업	이문의	인성개발(주)	정진오	민간문화재단
김지혜	오경아	정주영	김미순	이현여주경실련	김두환	김종복	박성희	송영득	오형선	이명신	이진혁		정옥형	최병탁	홍경아	권경자	김수자	남봉현	박현숙	안경수	이법열	인천역사박물관	정창훈	한국사회인간학본부
김진영	오성탁	정초연	김성춘		김미혜	김종원	박수자	송영득	우근배	이미희	이찬우		정유리	최복순	홍성동	권남구	김승남	남세종	박홍윤	안동찬	이병기	인천광역시북부지부	정철	한국농업경영학회
김창현	유기용	정하성	김숙자	강경모	김병기	김진영	박양래	송은주	우순애	이박우	이창규		정윤지	최상동	홍원표	권대현	김승진	남종희	박홍철	안병준	이병철	인천상공회의소	정희윤	한기남
김한일	유영표	정해경	김영표	강석립	김병수	김진용	박옥선	송이식	우순희	이백선	이창수		정윤희	최성원	홍은하	권미정	김승희	남지승	방광설	안재균	이상동	인천상공회의소	정희윤	한기남
김햇님	윤경일	조경승	김유성	강신욱	김봉덕	김진창	박인	송정호	우종만	이복수	이창수		정은영	최옥명	홍종민	권오경	김시철	남창섭	방수환	안희섭	이상영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	조광희	한만송
김현진	윤덕규	조소연	김정선	강영애	김상실	김창균	박인오	송준규	우현녀	이부경	이천수		정은희	최용철	황경애	권오연	김연옥	남홍우	방종설	양광범	이상진	인천여성개발센터	조동암	한상열
김호수	윤성미	조재국	김종구	강정순	김선우	김창수	박일엽	송창신	원경희	이상년	이철희		정인우	최은실	황규문	권용희	김연옥	노국진	배성수	양의만	이상훈	인천재능대학교	조병호	한창원
김후승	윤수영	조춘선	김현태	강창영	김선일	김춘자	박재선	신계영	원종수	이상원	이춘석		정일구	최인근	황규문	권욱한	김영구	노승환	배승휘	양희석	이석률	인천지방변호사회	조복순	한창인
나진석	윤정원	조항욱	나형선	고경애	김선희	김태진	박재우	신덕선	원종순	이상태	이충일		정정순	최인식	황인동	권정호	김영국	대한국립현대미술관	배철현	엄연주	이성한	인천항만연수원	조영희	함문숙
노국환	윤종대	조현주	박병규	고옥자	김선희	김학경	박전희	신동신	유경윤	이상혁	이충환		정진학	최재화	황인재	권혁철	김영수	도영운(주)	백동수	여승철	이애경	인천항발전협의회	조용철	함지현
류호웅	윤형로	조호미	박성현	고윤지	김성국	김학재	박전희	신동윤	유상열	이석환	이판용		정춘화	최정관	황현숙	김의료재단	김영옥	도지성	백민섭	오경환	이연숙	임강민	조용화	함창학
박기두	이경우	지은숙	박숙희	고인정	김성국	김현미	박정하	신동천	유상희	이선	이학수		정하근	최정숙		김갑봉	김영준	류병희	백응섭	오광민	이용우	임승관	조우성	허도병
박민기	이광자	진광규	배선주	공미선	김성길	김현숙	박정화	신두임	유승열	이선정	이한표		제영기	최정화		김경원	김옥산	류제홍	범아검수(주)	오승환	이용준	임재훈	조원민	허우범
박석두	이그루	채현	서문석	구경혜	김성애	김형식	박종구	신영호	유재경	이성규	이해철		조경국	최중		김경태	김용구	명선목	변성준	오원선	이용철	임한택	조인권	허주형

월간 경제편

2017년 11월 12일



허창희	심동희	한성호	고영수	박미현	현종철	맹창호	이재운	(주)청주재활센터	김계욱	김성희	김재춘		김한국	맹현숙	박종국	서완석	신영구	연철흠	유재일	이명훈	이재영	이효상	전세식	조경주
현명덕	안수현	홍순필	고영식	박상미	현창석	명진아	이철호	강대성	김관식	김승일	김재학		김황래	메타바이오메드	박종룡	서우석	신영창	연호석	유주하	이미선	이재원	이종열	전용열	조규원
홍기석	안정훈	황병해	고정훈	박승훈	홍기홍	박미경	임승안	강민오	김광복	김수열	김정문		김효일	명정희	박종선	서울고속(주)	신영희	염우	유철호	이미순	이재원	이화련	전용표	조규호
홍성유	양창훈		고태식	박재완	홍성화	박민숙	장경식	강병용	김광성	김수정	김정승		김희수	문성오	박종을	서준철	신옥희	오경아	유행열	이민영	이재은	이효숙	전우석	조동순
홍애경	엄상섭	정읍경실련	고행곤	박정은		박민자	장기수	강병호	김광직	김수환	김정웅		김희숙	문종국	박종혁	서효석	신용재	오경옥	유현덕	이범구	이재춘	인견연대 슴	전창해	조동욱
홍옥표	오상현		김강문	변성언	천안아산경실련	박복연	장명수	강석형	김광희	김순구	김정일		김희식	문화창	박종효	석명용	신일전기공업(주)	오명진	유환철	이범석	이정규	인근철	전희택	조상현
홍인식	유창엽	강창조	김경용	변정철		박상면	장원철	강성래	김교선	김순영	김정초		나영구	민경역	박종희	선종열	신철영	오미정	육미선	이병관	이정석	임근수	정경화	조성구
황덕성	윤영수	김용철	김관식	부상원	강민숙	박수석	장재식	강성식	김국환	김승환	김중구		나채경	민광기	박지영	선지연	신태경	오병건	육종길	이병호	이정수	임기중	정길재	조성수
황석광	윤철웅	김은정	김광섭	부윤삼	강용봉	박종갑	전승례	강성호	김규설	김성호	김중기		남기상	민선희	박진우	설경철	신필희	오상록	윤건영	이복순	이정아	임동현	정란희	조성오
황수연	윤태영	김을수	김광일	송대영	강은선	박종복	전오진	강영희	김규원	김애영	김종철		남대우	민승기	박친규	성기남	신해운	오석송	윤관수	이상규	이정협	임미애	정문섭	조수종
황용선	은영주	김택술	김기훈	송석연	강인영	박태서	전종한	강은희	김기영	김양식	김종태		남성욱	민창식	박창호	성창기	신현규	오세란	윤미정	이상근	이종섭	임병락	정미화	조승연
황은우	은용우	김현	김남혁	송순	강태윤	박현희	정구봉	강진성	김길후	김연식	김종태		남성욱	박관주	박철규	성한용	신현식	오수희	윤병희	이상복	이종수	임병원	정병숙	조영화
황제우	이민호	박래수	김동욱	송승호	강희두	백우현	정미영	강태재	김남진	김영근	김주복		남윤빈	박광수	박철석	소순창	신흥기업(주)	오연경	윤상이	이상식	이종실	임성진	정상섭	조용숙
	이보향	박영민	김동진	신용현	고영술	복아영	정병인	강현구	김대광	김영란	김준경		남일현	박금순	박철완	손세원	신희숙	오영미	윤석위	이상종	이종원	임성총	정상신	조원주
전주경실련	이선미	송민수	김동훈	신종은	구분영	송용완	정성진	강호문	김대중	김영란	김준기		남중순	박기환	박현순	손윤희	심규석	오영애	윤순현	이석구	이종윤	임순욱	정상완	조윤행
	이승현	이광호	김영준	안영철	구자형	신동현	정진선	강호승	김동암	김영민	김준년		네모토 마사후쿠	박남순	박형배	손은성	심상학	오영필	윤정수	이석희	이종한	임승빈	정성래	조은애
강원균	이영식	이상길	김봉석	양문석	금영기	신영철	정치화	경준용	김동욱	김영배	김준수		노근호	박노일	박호표	손정훈	심수영	오윤주	윤진현	이선미	이주민노동안센터	임용수	정성희	조을선
강유정	이장춘	이상실	김봉철	양봉석	김경은	안주형	정하진	고금순	김동일	김영식	김준태		노만균	박영규	박홍래	손호진	심영미	오제세	윤찬열	이선순	이주봉	임용현	정수창	조일원
강일영	이재운	임영관	김봉희	양성주	김기태	양경모	조강석	고상돈	김동진	김영재	김지연		노재량	박문희	박희분	손희준	심의보	오종영	윤태한	이선우	이주선	임은정	정순배	조정식
강창수	이점수		김부찬	양시경	김길년	양승조	조미경	고영구	김동현	김영준	김진철		노진호	박미애	반영운	송광희	심진행	오준영	윤한식	이선희	이주형	임일수	정승희	조종호
강호수	이정	제주경실련	김석	양우선	김미경	오수균	조영주	고영재	김동형	김영진	김창석		녹색청주협의회	박미영	반주현	송길화	씨투넷(주)	오창민	윤현우	이성민	이준수	임재경	정영경	조진희
곽이구	이현희		김석범	오승용	김미수	오승화	조하심	공공디자인이즘	김두호	김영태	김천식		농업농촌진흥청	박민수	배병기	송선호	아이클청주생협	오태경	윤혜정	이수복	이준희	임재규	정영주	조향전
국승철	임규삼	강경희	김선호	오영익	김미숙	오인철	주진혁	곽규은	김말숙	김영환	김철		대신정기(주)	박민수	배상은	송은숙	안병대	오태진	윤호영	이수영	이종섭	임종승	정영래	조형규
권미경	임성진	강금중	김성수	오영환	김봉미	우승윤	주흥중	곽나현	김명수	김영환	김춘희		대정건설(주)	박범혁	배용환	송의천	안영숙	오훈영	이가빈	이수한	이종원	임지민	정영섭	조혜경
김만식	장석재	강봉석	김성준	오정훈	김상관	유영길	최경식	곽덕신	김명자	김영희	김태성		도경민	박석현	백미경	송일근	안정현	오희	이건철	이순남	이종현	임차남	정영희	주서택
김병석	전기환	강성실	김세겸	오창현	김상철	유진영	최경영	곽승호	김문욱	김원희	김태성		도선봉	박성순	백승협	송재경	안종태	우상동	이경수	이순호	이종훈	임한빈	정우영	주재우
김삼덕	정구영	강승환	김수남	유덕현	김세곤	윤권중	최석남	구남휘	김문중	김용규	김태준		도승기	박성호	법무법인 주성	송재봉	안창만	우정명	이경순	이순희	이지숙	임한수	정은경	주재구
김성주	정상중	강인창	김수연	유두석	김연	윤일규	최신수	구안서	김미라	김용덕	김태희		두깨비살림영농조합	박세웅	변광섭	송충찬	안태희	우정순	이경희	이승배	이지영	임한경	정은희	주재현
김수환	정세윤	강정임	김승필	이성호	김용진	윤정섭	최창환	권경미	김미숙	김용덕	김평환		라운애	박연수	변만수	송태성	양계인	우진교통(주)	이광식	이승준	이지영	임혜숙	정인수	추창백
김용권	정태원	강지용	김승훈	이숙희	김종문	이경숙	하종률	권기승	김미숙	김용석	김필재		류규식	박영미	변민수	송태화	양기정	원광희	이광용	이애선	이차영	임희영	정일기	지동규
김용휘	조선환	강창균	김신순	이용민	김종우	이경원	한광수	권미경	김미현	김용태	김학구		류근모	박영미	변상태	송혜근	양기춘	유경훈	이광희	이양우	이찬호	장경석	정일택	지유석
김장기	조영범	강창식	김양보	이진수	김진국	이경주	한문식	권성안	김민호	김용학	김학균		류근운	박영숙	변상호	송호현	양미선	유광식	이귀숙	이연옥	이창록	장남운	정장영	진중현
김정길	조찬완	강태운	김영희	이화수	김진태	이명근	한형규	권수복	김병우	김용규	김학민		류덕환	박영순	변성민	송희삼	양승구	유국렬	이귀형	이영숙	이철중	정중대	정재량	차은녀
김종원	주재호	고경업	김용범	임숙자	김철수	이병덕	허영	권영기	김병의	김원식	김학실		류연욱	박용석	변은영	신경아	양원철	유근수	이규선	이영진	이철희	정병순	정준영	차인용
김주희	진정현	고광희	김우준	임정현	김태명	이상일	허종일	권오건	김봉주	김유미	김한솔		류용걸	박용연	변의수	신국희	양지중합건설주식회사	유미숙	이규호	이영희	이학철	정병희	정지영	채희관
김형식	채주석	고동철	김원규	장원석	김판규	이상춘	현선욱	권오은	김상무	김유호	김한태		류우열	박은경	변장섭	신규식	양찬섭	유민상	이기정	이옥인	이한례	장선배	정진아	청주YWCA
라형연	천상덕	고명호	김익태	정상철	김형조	이상호	홍영식	권태성	김상수	김윤오	김현상		류재욱	박익규	변종윤	신동선	엄경출	유선우	이길재	이유정	이한훈	장영건	정진원	청주WC(여성회)명예회장
류충성	최낙용	고병기	김인영	조문수	김혜영	이서영	홍영중	기경희	김상용	김은옥	김현주		류재형	박민숙	봉원진	신동예	메듀크리안트	유성훈	이길환	이윤복	이혜수	장재봉	정진하	청주노동인권센터
박규만	최동성	고봉석	김정수	채호진	김홍철	이선열	황종현	김갑용	김선영	김용철	김현진		류지봉	박인영	봉윤근	신동호	해스케이피어스 주식회사	유순영	이대용	이은숙	이항미	장호진	정찬영	청주신안단지관리공단
박명진	최문희	고봉수	김중훈	한남석	김효실	이수현	황천순	김강일	김선희	김인숙	김형규		류진호	박인자	사단법인인정다리	신명섭	연규순	유스투게더	이동로	이인우	이항숙	장홍원	정철	청주상공회의소
박복희	최수진	고상봉	김창기	한용환	니아란	이승열		김건도	김성민	김인자	김형우		류찬걸	박재경	서건석	신명수	연규용	유승덕	이동진	이일만	이현수	전광호	정충선	청주상공회의소
박상민	최요일	고석건	김창순	한재철	내일시스템(주)	이원자	청주경실련	김건일	김성수	김일경	김형창		류학천	박재관	서길용	신명숙	연방희	유시송	이두영	이일우	이현수	전금식	정대진	청주성안길생명생명보험조합
박양림	최원영	고석봉	김창연	허정아	노덕우	이점순	(주)명성엔지니어링	김경자	김성중	김재숙	김호숙		류현숙	박재익	서대석	신병식	연영규	유영경	이만형	이장희	이현식	전길자	정현순	청주성안길생명생명보험조합
박효민	최정일	고석봉	김철수	현경호	노순식	이종욱	(주)세일	김경자	김성천	김재원	김홍구		리드산업개발(주)	박정환	서미화	신성일	연영태	유영숙	이만희	이재덕	이현주	전년규	정희승	청주사전통시정연학회
성치원	최종렬	고영미	김형진	현덕진	류임상	이종필	(주)엘지화학	김경호	김성호	김재중	김홍성		마재광	박정환	서부중합사회복지관	신승주	연인하	유영아	이명순	이재숙	이형우	전동기	젠다사회문화연구소	청주여성직업학회
송약용	최진희	고영빈	문건식	현영철	류지현	이종호		김경호	김성호	김재중	김홍성		맹석주	박종관	서연숙	신언관	연준	유응모	이명호	이재영	이혜정	전병선	조경주	청주총독회경동연합

2017년 11월 12일

2017년 11월 12일

최각규	최재일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하태종	허석렬	황락훈	김남철	박도수	손홍주	이복연	전만식	춘천상공
최경호	최정호	충북민주인문사회연구소	홍성영	허성만	황명규	김대영	박동운	송창근	이상섭	전성휘	회의소
최광민	최종문	충북시민재단	한범덕	허영	황미화	김석중	박미현	신선철	이상철	전양호	하상준
최명섭	최종예	충북여성개발원	한상화	현상주	황선건	김선배	박상규	신혜숙	이석원	전운성	한희민
최상범	최종익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승환	현진	황성주	김영준	박상렬	안호춘	이승준	전찬일	함태성
최상희	최진욱	충북지역개발회	한영선	형미희	황종빈	김용식	박정근	양태식	이원규	전호성	허영준
최성희	최진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원영	홍강희	황희연	김정현	박형일	윤준형	이은영	정의성	허장현
최영중	최종진	충북청주수업개발동조합	한인섭	홍서원		김진상	방명열	유재원	이인섭	정지만	허중영
최우식	최태호	충청대학교	한정현	홍성학	춘천경실련	김찬중	방수진	윤정혁	이종민	정휘돈	황덕호
최운침	최현숙	충청에너지서비스	한종철	홍성학		김한택	변용환	윤재경	이희창	조성모	황혜숙
최원호	최현태	표한홍	함영욱	홍승표	고태규	남수희	변좌용	윤재선	임재선	조성자	
최윤정	최형도	풍경섭	함종철	홍우표	권용범	남형우	변지량	윤진현	전규호	진장철	
최은실	최호균	하옥란	행동하는	홍승표	김정숙	박경철	석영기	윤학로	전근우	최영진	
최재국	충북개발공사	하재성	복지연합	황경수	김광배	박대진	손현기	이관행	전동준	최희수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사회정책팀	02-3673-2145	간사: 박지호
기획교육팀	02-766-5626	국장: 김한기	국제팀	02-766-5623	간사: 정호철
회원팀	02-766-5627	부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국장: 김성달, 부장: 최승섭
홍보팀	02-766-5628	간사: 유애지, 허재필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4	국장: 권오인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장: 권오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국장: 남은경, 간사: 김정훈
		간사: 최예지, 오세형, 이성윤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간사: 권태환
정치사법팀	02-3673-2141	국장: 김삼수, 간사: 정택수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국장: 윤철한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간사: 조성훈	월간 경실련	02-766-5626	이사: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간사: 이수희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간사: 박은영			국장: 이병관, 유영아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부장: 서해립			간사: 김미진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배성훈	경상권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부장: 김성아, 팀장: 이경진	거제경실련	055-637-9451	간사: 배동주
경기·강원권			경주경실련	054-773-7851	부장: 김향희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간사: 김정숙	전라·제주권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홍영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형, 부장: 유병욱	여수경실련	061-643-2110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구숙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주상윤, 간사: 변정혜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통우
양평경실련	031-772-2091	국장: 여현정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제주경실련	064-726-2530	간사: 김신숙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식, 부장: 정연미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욱			